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국방대학교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제3회 KWO 나지포럼

(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2024년 6월 21일(금)
13:30~17:00
전쟁기념관 이병형홀

6·25전쟁 교훈과 안보 정책 방향

제3회 KWO 나지포럼

6·25전쟁 교훈과 안보 정책 방향

제3회 KWO 나지포럼

6·25전쟁 교훈과 안보 정책 방향

일시 : 2024년 6월 21일(금) 13:30~17:00
장소 :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
주최 : 전쟁기념사업회·국방대학교

발표주제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13:30~14:00	등록	등록 및 명찰 배부
14:00~14:30	**개회식** 【사회】김유식 (전쟁기념관 학예연구팀장)	• **국민의례** • **개회사**(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 **환영사**(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 **기조 강연**: 6·25전쟁 재평가와 한반도 안보 한기호(국회의원) • **기념촬영**
14:30~15:10	**1세션 발표/토의** 【좌장】 노경수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 **6·25전쟁 재평가와 현재의 안보유형** 【발표】 김명섭(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1】 김낙진(전쟁기념관 학예부장) 【토론2】 손경호(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15:10~15:25	휴 식	
15:25~16:25	**2세션 발표/토의** 【좌장】 박인국 (최종현 학술원장, 전 유엔대사)	• **북한의 핵 위협과 대남 정책 전망** 【발표】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토론】 이미숙(문화일보 논설위원) •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와 발전방향** 【발표】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 【토론】 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장)
16:25~17:00	**리셉션**	
17:00	**폐회**	

〈목 차〉

개회사 ▮ 백승주 ····· 6

6·25전쟁 재평가와 한반도 안보 ▮ 한기호 ····· 9
1. 잊혀진 전쟁 ····· 12
2. 정치권 일각의 그릇된 안보관 ····· 14
3. 국회에서 실종된 "안보에는 여야 없다" ····· 15
4. 진전없는 남북관계 ····· 17
5. 결언 ····· 18

6·25전쟁 재평가와 현재의 안보위협 ▮ 김명섭 ····· 21
1. 서론 ····· 23
2. 6·25전쟁에 대한 기존 평가들과 안보위협 ····· 25
3. 결론 ····· 43
【토론: 김낙진】 ····· 45
【토론: 손경호】 ····· 48

북한의 핵 위협과 대남 정책 전망 ▮ 박원곤 ····· 51
1. 김정은의 전쟁할 결심 ····· 53
2. 북한 핵전략(교리) 분석 ····· 56
3. 북한 핵 대응 ····· 60
4. 결론 ····· 65
【토론: 이미숙】 ····· 67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와 발전방향 ▮ 박영준 ····· 75
1. 들어가는 글 ····· 77
2. 탈냉전기 국제질서 붕괴와 제2차 냉전시대의 도래 ····· 79
3. 한국 대외 안보자산으로서의 미일동맹과 한일 안보협력 ····· 87
4.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과제 ····· 94
5. 맺는말 ····· 98
【토론: 김재천】 ····· 103

개 회 사

백 승 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바쁘신 중에서 오늘 전쟁기념사업회와 국방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KWO 나지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한기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학술회의 좌장사회를 맡아주신 노경수 교수님, 박인국 전 유엔대사님, 그리고 발표·토론을 맡아주신 김명섭 교수님, 박원곤 교수님, 박영준 소장님, 김재천 원장님, 손경호 교수님, 이미숙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KWO 나지포럼은 '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이라는 뜻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제3회 나지포럼은 6·25전쟁 74주년을 맞이하여 '6·25전쟁 교훈과 안보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현재의 북핵 위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 안보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74년전 6·25전쟁을 겪은 우리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안보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KWO 나지포럼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기념사업회 정관은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의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쟁기념

사업회는 이러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교훈 바탕으로 안보기반 평화와 통일로!” 라는 비젼 아래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쟁기념사업회에 부여된 호국의 전당 역할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대비하는 데 앞장서서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기조강연

6·25전쟁 재평가와 한반도 안보

한 기 호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한기호 의원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와 국방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나라를 지키는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님과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실무자분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남중국해 영토분쟁이나 양안관계 악화 등의 국제적 분쟁 또한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여파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열리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점차 크게 점쳐지면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트럼프 인사 진영이 더 이상 주한미군을 필요치 않는다며 트럼프의 재선이 한미관계의 균열과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향후 미국 정치지형은 한·미 방산협력,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우리나라의 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북한은 6.25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육상·해상·공중에서의 무력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공격 등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까지 감행하며 우리 안보를 다각도로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조건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6.25전쟁이 어떤 의미이며,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한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잊혀진 전쟁

다음주 화요일, 6월 25일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경남 밀양의 피난민 텐트촌에서 태어났습니다. 6·25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와 저처럼 전쟁 직후에 유년기 시절을 보낸 세대는 공산주의로 무장한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으며, 산업화를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온몸으로 기억합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도, 눈앞에 고향 땅을 두고도 찾아갈 수 없는 실향민에게도, 저에게도 6·25전쟁과 그 상흔은 이미 지난 과거가 아니라 생생하게 기억하는 현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들은 6·25전쟁을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세계사적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의 중간에 있는 전쟁이라 그렇다거나, 두 전쟁에 비해 세계적으로 미친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도 있고, 누군가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로 전쟁이 중단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되는 6·25전쟁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외국에서는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전쟁으로 초토화가 된 서울에서 맥아더 장군은 "이 나라를 복구하는 데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고, 세계 무대에서 주요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뤘음에도 6·25전쟁의 상흔과 그날의 교훈조차 빠르게 잊어간다는 사실입니다.

6·25전쟁의 영향을 받은 세대는 북한이 평화와 도발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복한의 대남전략과 저의가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다수가 북한의 각종 위협에 더욱 단호히 대처하고, 안보에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논쟁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줄어들고, 이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이뤄진 자유대한민국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가 어느덧 경제활동과 사회 구성원의 측면에서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대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세대가 줄어들고, 자유와 평화를 중시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안보라는 토대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음조차 함께 잊혀지고 있는 듯합니다.

2014년, 전쟁의 아픔을 딛고 건국과 산업화 시대를 거쳐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국제시장〉이 큰 흥행을 거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영화속 이야기가 큰 울림과 여운을 주었고, 언론은 잘 만든 영화 하나가 세대 간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며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에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어야만 세대 간 이해를 도울 수 있다니, 그 간극이 얼마나 클 것인지 새삼 좌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쟁의 교훈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전쟁기념사업회의 역할과 노력이 더없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2. 정치권 일각의 그릇된 안보관

다른 시대를 살아온 이들이 어우러져 살며 겪는 갈등과 이념적 차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것이니 우리에게도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는 세대와 이념을 초월하여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피로 이루어진 소중한 결실이자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선 안 될 전쟁의 참상과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목적으로, 또는 왜곡된 안보관을 바탕으로 세대와 이념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6·25전쟁을 "6·25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한국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과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기리는 말조차 남기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 김일성의 책임을 국제사회의 대립이나 지정학적 조건으로 오도하는 그릇된 역사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면서 "6·25전쟁은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양비론적 태도는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 전쟁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 행위라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여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이념 간 논쟁의 씨앗을 낳는다는 점에서도 정치인으로서 백번 바로잡고 사죄해야 할 말입니다.

민주당의 그릇된 역사인식, 그리고 안보라는 토대 없이 평화만을 노래한 결과는 9.19 군사합의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한 국방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추구한다면 결코 과거를 잊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3. 국회에서 실종된 "안보에는 여야 없다"

저는 제18대 국회의원부터 줄곧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종종 "안보에는 여야 없다"는 표현을 쓰면서 군의 잘못된 처신이나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표현이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우리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일본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존하는 가장 실제적인 적,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본의 탐지자산은 8개의 군사정보위성, 이지스함 8척, 공중조기경보기 18대, 탐지거리 1,000km 이상인 지상레이더 4기 등 그 규모 면에서 대한민국의 탐지자산을 상회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저궤도로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는 경우, 지구 곡률로 인한 우리 군의 음영지역을 일본의 탐지능력을 통해 보완할 수 있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북한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일본과의 군사협정'이라는 프레임 아래 정부·여당을 '매국노' 취급하며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이미 GSOMIA는 양국 간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인도 등 30여개 이상의 국가와 맺고 있는 협정인데도 말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일반 국민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 안보 문제를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민주당은 본 협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지소미아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 협상"이라며 맹비난했고, 문재인 당시 전 대표는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할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임건의였다"고 비꼬았습니다.

"GSOMIA는 박근혜 정권이 일본 반동들과 공모결탁하여 조작해 낸 것이자 침략적인 3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힐난하던 북한 노동신문의 논조와 궤를 같이 합니다.

한편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각국이 종료 90일 전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그런데 친일, 매국을 부르짖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7일 협정 연장을 결정했고, 이후 2019년까지 유지해오다가 한·일간 외교관계를 이유로 협정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한·미·일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를 지칭하며 '문 정부'라는 이례적인 표현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당시 청와대는 협정 파기 직후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으나 미국은 즉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대한민국군사기밀을 팔아넘기는 협정이 아니라 우리 군사안보상 필요한 협정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며, 이후에도 일본과의 외교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의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내다 버린 것입니다.

안보 없이는 그들이 부르짖는 평화, 민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친일몰이에 몰두한 민주당의 패악은 대한민국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4. 진전없는 남북관계

"남한에는 5만명의 고정간첩이 있다"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간첩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합리적입니다. 2022년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사건 등 최근 사건도 있지만 2021년 7월에 구속된 충북동지회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간첩의 활동 영역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충북동지회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과 공작금을 받고 F-35 도입 반대, 김정은 답방 추진활동, 국내정세 및 동향 수집·보고 등 첨단무기 도입 반대와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총선 등에 출마하고, 신문사를 만들어 북한 수뇌부를 칭송하는 선전활동을 벌이는 등 사회 곳곳에서 활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활동한 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으로, 문재인 정부의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남북관계가 표면적으로나마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순간에도 북한의 공작이 계속되었습니다.

전후 북한의 대남도발은 시기마다 그 형태가 변해왔으나 본질은 같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1990년대까지는 무장공비 침투가 주로 이뤄졌고, 2000년대 전후로는 해전·심리전이었으며, 2006년 1차 핵실험을 위시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주를 이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해주·옹진·개성 등지에서 남쪽을 향해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하여 현재까지 7차례, 최소 4일에서 최대 16일간 우리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을 위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8일부터는 오물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수차례 살포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동요와 혼란을 야기했고,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야당의 비난이 이어지는 등 남남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체제 유지나 내부 결속, 대외 선전용 등 북한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도발 유형과 수위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6·25전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이 여전히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과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한 민족해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의 관계'로 정의하고 한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국가관계, 두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오물풍선과 GPS 교란 공격 이상의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결언

우리 정부는 6월 4일부로 북한의 비상식적인 오물풍선 살포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면서 추후 북한의 어떤 유형의 도발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미래 인구구조를 감안해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육군 4개 사단·2개 군단을 해체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어 2023년 말 국군 상비병력은 47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체계도 운용할 수 있는 군인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미래 안보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역한 간부 숫자는 9,481명으로 2021년 6,785명에 비해 39.7% 증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3년 전역자 중 대위·중사 전역인원이 4,061명으로 42.8%를 차지하며, 이는 2021년에 비해 43.9% 증가한 수치라는 점입니다. 어느 언론의 일침처럼 우리 군의 '허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역내 안보환경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은 시점에서, 군 상비병력의 절대적인 감소와 함께 청년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현상은 대한민국 안보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장교·부사관 복무여건과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이 시급합니다. 또한 의무복무만으로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에서 '나지포럼'의 존재가 더욱 빛나고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6·25전쟁의 교훈과 안보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오늘 포럼에서 역내 안보정세 분석과 함께 북한의 대남 정책을 점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방향과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제언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25전쟁 재평가와 현재의 안보위협

김 명 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서론

나라는 '기억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다문화, 다인종사회가 될수록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기억이 중요해진다. 전문가들을 통해 재편되고 재해석되는 기억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들을 모아서 만든 사유의 플랫폼과도 같다. 나라를 위한 공동의 헌신도 이러한 사유의 플랫폼을 어느 정도 공유할 때 가능하다. 그동안 평양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도발들과 핵무장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에 관해 경종을 울리는 많은 훌륭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한 연구들이 울리는 경종이 제대로 경청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 편향된 역사교육에 의해 왜곡된 사유의 플랫폼에 있다.

한국현대사의 최대사건이었던 6·25전쟁에 대한 공동의 기억은 대한민국에 관한 사유의 플랫폼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기억의 조각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재건하여 독립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같은 해 12월 12일 파리 샤이요궁에서 개최된 국제연합(UN) 제3차 총회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불과 2년이 안된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은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과 박헌영 간의 공산주의적 관념연대에 기초한 조선인민군의 전면공격으로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가 3년 여의 전쟁을 치르면서 재탄생했다. 이후 6·25전쟁에 대한 기억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기억공동체의 플랫폼을 형성해왔던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6·25전쟁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되어 1986년에 이미 연구사를 정리한 단행본이 출간된 바 있고, 2010년에 수정, 증보되었다.[1]

---

1 Keith D. McFarland, *The Korean War: An Annotated Bibliography*. 2nd ed. (New York: Routledge, 2010). 또한 다음과 같은 연구사적 연구들이 있다.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 (서울: 博英社, 1989, 2003, 2010); 김학준, 『남북한 문전』 제10권 현대 (3): 6·25전쟁 (용인: 단국대학교출판부, 2022); 김홍영, 심헌용 외,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러시아연방 국방부 군사사연구소, 2009); 이완범, "6·25전쟁 연구의 국내적 신경향," 『군사』 제71호 (2009년 6월); 박명림,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서울: 나남, 2011); 손경호, "최근 한국전쟁 연구동향: 2005년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6집 (2011), 202-26. 필자 역시 6·25전쟁 연구동향을 정리한 바 있다.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70-103.

한반도 6·25전쟁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계속되면서 끊임없는 재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6·25전쟁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범주화(categorization)함에 있어서는 전통주의(traditionalism), 수정주의(revisionism), 후기 수정주의(post-revisionism)'라는 미국 학계의 방식이 많이 차용되어 왔다.[2]

그런데 이러한 범주화를 한국학계에 널리 소개했던 학자도 2003년 개정판과 2010년 개정판에서 이러한 방식은 "지난 날에 비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 전통주의-신전통주의와 수정주의-신수정주의라는 구분마저 무의미해져 간다"고 보았다.[3]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6·25전쟁 연구동향을 포괄적으로 성찰해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미국식 구분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발표자는 이러한 범주화 대신 공산주의[4], 반공주의, 그리고 반-반공주의에 따른 범주화를 제안한 바 있다.[5] 이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범주의 6·25전쟁 평가들이 북핵과 미사일과 같은 경성위협(hard threat)과는 다른 연성위협(soft threat)으로서 국가안보와 연관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J. Samuel Walker, "Historians and Cold War Origins," in Gerald K. Haines and J. Samuel Walker, eds., American Foreign Relations...; 하영선 편,『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 Michael J. Hogan, ed., America in the World... 전통주의 대 수정주의라는 범주화를 적용하여 6·25전쟁 관련 연구동향을 정리, 분석한 선행연구들로는 김학준, "6·25 연구의 국제적 동향: 6·25 연구에 관한 문헌사적 고찰," 김철범 편,『한국 전쟁을 보는 시각』(서울: 을유문화사 ; 유영익 편,『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서울: 연세대학교 ... ; Myongsob Kim, "Reexamining Cold War History and the Korean Question,"...

3 김학준(1989, 57-58); 김학준(2003, 102-103); 김학준(2010, 102-103).

4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무)의식적으로 혼용하기도 하지만 양자의 개념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특히, 한국사 교재들에서는 1917년 2월과 10월 러시아의 정치변동을 "러시아 혁명"이라고 통칭하면서 그 중심사상을 '사회주의'라고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가는 대합실로 인식했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자체를 최종단계로 보면서 공산주의와 대립했던 사회주의는 달랐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와 대립했던 반공사회주의는 좌우파 양쪽에 실재했다. 김명섭, "한국현대사 인식의 새로운 진보를 위한 성찰,"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심포지엄, 2011년 5월 20일 서울교대; 김명섭, "공산주의 대 파시즘의 관념충돌과 기독교: 조선/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선택을 중심으로,"『韓國政治外交史論叢』제39집 1호 (2017).

5 김명섭, "6·25전쟁 연구동향과 전망: 전쟁평가을 둘러싼 관념충돌을 중심으로,"『군사』100호 (2016.9), 229-59. 이 발표문은 이 원고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2. 6·25전쟁에 대한 기존 평가들과 안보위협

2-1. 공산주의적 평가와 안보위협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시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존슨(Hiram Johnson, 1866~1945)은 "전쟁에서 최초의 사상자는 진실(The first casualty, when war comes, is truth)"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동양에서는 더 오래 전에 한비자(韓非子, 서기전 약 280~233)가 "전쟁 중에는 속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戰陣之間, 不厭詐僞)"고 했다. 전쟁 시작과 동시에 전승(戰勝)을 위한 기만은 정당화되었다.

1950년 6월 25일 개전 직후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기만적 선전전술을 구사했다. 6월 25일 평양시각 오전 10시(서울시각 오전 11시)[6] 평양라디오는 "남조선의 공격을 북조선 인민군이 격퇴했으며, 남조선이 군사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조선은 단호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방송했다.[7] 6월 26일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명의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방송했다.

> 리승만역도들은 동족살륙전쟁을 통하여 남반부에 존재하고 있는 일제시대와 다름없는 반인민적 반동 통치제도를 공화국 북반부에까지 실시하려 하며 우리 인민들이 쟁취한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승만 반동도배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의한 토지개혁의 결과로 토지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에게서 토지를 빼앗아서 다시 지주들에게 돌려 주려하며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모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려 합니다. 이승만 역도들은 우리 조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며 조선 인민을 미제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원문 그대로, 밑줄 첨가][8]

---

6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령에 따라 1950년 3월 31일 0시를 1시로 바꾸는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를 실시했다.

7 미 태평양군 문서군, 국립중앙도서관, 『NARA기록으로 보는 6.25』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0). 1950년 6월 18일 김일성은 소련에게 라디오방송국 방송기자재를 급히 요청했었다. "1950년 6월 18일 평양 주재 소련 대사 쉬띄꼬프가 외무성 극동1과장 임시 직무대리 꾸르듀꼬프에게 보낸 문서,"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집』.

8 "전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장군의 방송연설," 『조선중

이처럼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에게 전쟁책임을 뒤집어씌우는 6·25전쟁 해석은 오늘날까지 평양의 방송, 박물관, 학교 교과서 등을 통해 유지, 재생산되고 있다. 평양의 공산주의자들이 6·25전쟁을 한국(대한민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현재까지도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그런 주장이 계승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만 혹은 프로파간다 이상의 관념적 연속성을 지닌 것이다.[9]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도 미신으로 간주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스스로 종교적 관념을 만들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종교적 교리로 만든다.

6·25전쟁을 "미 제국주의자"와 "일본 제국주의자"의 도발에 맞선 "정의의 전쟁"으로 보는 공산주의적 평가는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전쟁관을 계승한 것이었다.[10] 김일성은 6·25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 12월 24일, 인민군 고급군관회의에서 행한 '인민군대를 강화하자'라는 연설에서도 "레닌의 교시는 인민군을 건설함에 있어서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실제적 사업의 토대"라고 역설했다.[11]

남조선로동당을 이끌다가 평양정권에 참여하여 부수상 겸 외무상이 된 박헌영도 1950년 7월 1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원조와 약속을 받고 리승만 정부는 자기의 미국상전의 지시에 의하여 6월 25일 조선에서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했다."[12] 박헌영은 서울이 국제연합군에 의해 수복되던 1950년 9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 미제국주의자들 및 그들의 앞잡이 리승만 도배들에 의하여 조선에서 도발된 전쟁이 우리 인민에게 가져온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난에 대한 전적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 [중략] 노예와 같이 충실하게 미국 상전의 지시에 따라 리승만 정부는 자기가 一九五O년 六월 二十五일에

앙년감, 1951-52』.

9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규정했던 공산주의는 역설적으로 피압박민족과 민중의 아편이 되었다. 전쟁의 배후에 존재하는 관념충돌에 관해서는 김명섭, 김석원, "관념충돌로서의 전쟁: 임진왜란과 6·25전쟁의 관념적 기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

10 레닌은 1916년에 집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군사강령" 중 "계급투쟁을 인정하는 자는 내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러시아내전을 "정의"의 전쟁이며 "방위전쟁"이라고 부른 바 있었다. 레닌, "프롤레타리아의 군사강령," 『사회주의와 전쟁 외』.

11 김일성, "인민군대를 강화하자(1952. 12. 24)," 『김일성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2 『로동신문』.

개시한 북조선에 대한 무력 침공의 준비 사업에 자기의 전 활동을 복종시켰다.[13]

중국공산당의 『인민일보』는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7일 "조선인민은 범죄적으로 진격한 자들을 격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이승만 위군(僞軍)의 대규모 군사공격을 반격하여 격퇴"했다는 6.25북침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14] 다른 한편으로 같은 날『인민일보』는 특유의 대륙적 둔사(遁辭)로 "조선의 전면적인 내전은 이미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내전확대론의 자락을 애매하게 깔아 놓았다.[15]

마오쩌둥은 1950년 6월 28일 연설에서 "중국 인민의 동정심과 전 세계 인민의 동정심은 모두 침략을 받고 있는 자를 응원하는 방면에 설 것이지 결코 미 제국주의 방면에 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킨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쟁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한 것이다.[16]

소련공산당(현재 러시아공산당)은 이러한 허위사실들을 '학문'적으로 포장하여 동유럽 공산진영을 비롯한 전 세계에 유포했다. 1951년 발간된 크랍초프의 『1945-1951년 미제국주의의 조선침략』, 1951년 발간된 미하일 박의 『미국의 조선침략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등이 이러한 공산주의적 관념에 입각해서 출간되었다.[17] 많은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공산주의적 평가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 간의 수교가 이루어질 무렵까지도 꾸준히 지속되었다.[18]

6·25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평가를 세계 지성계에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인물은 프랑스의 저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였다. 그는

13 『로동신문』.

14 "朝鮮人民爲擊退進犯者而奮鬪," 『人民日報』. 여기서 위군(僞軍)은 한국군에 대한 중국공산당 식의 명명으로서, 이는 중국공산당이 만주국 군대를 지칭하던 용어이기도 했다.

15 "朝鮮人民爲擊退進犯者而奮鬪," 『人民日報』.

16 "毛澤東主席在中央人民政府委員會第八次會議上關于美國侵略臺灣和朝鮮的講和一節錄," 1950년 6월 28일.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韓國戰爭과 中國』.

17 이재훈, "러시아의 한국전쟁 연구동향,"『군사』 제55호(2005).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러시아연방 국방부 군사사연구소,『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18 예외적으로 유고슬라비아 학자들 중에는 6.25남침론을 인정한 학자들도 있었다. 김철민, 『한국전쟁과 동유럽: 유고슬라비아는 왜 남침설을 지지했는가?』 (서울: 아카넷).

소련-프랑스 협회(Association France-URSS) 회장을 맡아 평화운동에 표방하면서 1952년 소련의 입장에서 '세계평화평의회'(Conseil mondial de la paix; World Peace Council) 공동의장을 맡았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창간을 주도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잡지 『현대(*Les Temps modernes*)』의 1952년 7월호에 "공산주의자들과 평화(les Communistes et la paix)"라는 논설을 발표했다.[19] 동지이자 친구였던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만류를 무릅쓰고 게재된 이 논설에서 사르트르는 "반공주의자는 개"(Un anticommuniste est un chien)라고 주장하며, 공산주의자들의 길동무(compagnon de route)를 자임했다.

사르트르와 동창이었던 레이몽 아롱은 사르트르가 빠져 있던 공산주의를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규정했다.[20] 그러나 많은 프랑스인들, 특히 청년들은 "레이몽 아롱과 더불어 이성을 갖는 것보다 사르트르와 더불어 속는 것이 낫다"(Il vaut mieux s''être trompé avec Sartre que d''avoir eu raison avec Raymond Aron)는 식으로 '지식인의 아편'에 취했다.[21] 프랑스의 좌파 신문 『리베라시옹』은 2017년 7월 2일자에 "아롱이 옳았다. 오호 통재라!"라는 기사를 게재했다.[22]

그러나 6·25전쟁이 "미제와 이승만 괴뢰도당"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평가는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평양의 교과서와 대중매체 등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6·25전쟁에 대한 선전과 왜곡이 반일에서 반미로 이어지는 조선민족주의[23]를 강화시킴으로써 평양의 3대 세습독재체제를 지탱해주고 있다. 평양에서 발간된 중학교 교과서는 "미제는 면밀한 계획과 준비에 기초하여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고 교육하고 있다.[24]

공산주의적 선전과 평가를 담은 영문서적도 출간되어 세계적으로 배포되어 있다.[25] 6·25

19 Jean-Paul Sartre, "les Communistes et la paix," *Les Temps modernes* ...

20 Raymond Aron, *L'opium des intellectuels* (Paris: Calmann-Lévy...

21 Michel Winock, "Sartre s''est-il toujours trompé?," *L''Histoire*, no. 295 (février ...

22 https://www.liberation.fr/debats/2017/07/02/raymond-aron-avait-raison-helas_1581053/ (검색: 2024.6.10.).

23 조선민족주의에 관해서는 김명섭, "조선과 한국: 두 지정학적 관념의 연속과 분화,"『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1호(2016).

24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 1930-1990년대: 중학교 6』(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5 Facts Tell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60); Ho, Jong Ho(허종호) et al., The U.S. Imperialists Started the Korean War (Pyongyang: ... ; 許宗浩, 姜錫熙, 朴泰鎬,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선전과 평가에 앞장서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역사서술체계를 수립하여 조선력사학회장이 된 허종호(許宗浩)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북측 위원장"("남측 위원장"은 강만길)을 맡아서 한국의 국사학계와 활발히 교류했다.[26] 이후 계속해서 방북한 한국사학자들은 허종호 등과 만나 만찬을 나누면서도 그들이 주도한 6·25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선전과 평가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중국공산당의 통제 하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교과서들도 줄곳 6.25북침론을 주장하다가 한중수교 이후에는 점차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이 폭발했다"(朝鲜战争爆发)는 모호한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조선전쟁"과 1950년 10월부터 시작된 "항미원조전쟁"을 구분한다. 여전히 중국공산당은 전자를 조선인들 간의 내전으로 평가하고 있고, 후자를 "조선내전이 발발한 후 미국 트루먼정부가 거리낌 없이 파병해 무장 간섭을 진행하고 조선에 대해 전면전을 발동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38선을 넘은" 이후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서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으로서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의 단결로 위대한 승리를 이끈" 전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27]

약 9천만 명의 당원,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国共产主义青年团)을 통해 약 14억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견지해야 할 역사관을 정해주고 있는 중국공산당은 덩샤오핑 시대에는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노선을 노선을 채택하기도 했었지만 6·25전쟁 평가에 있어서는 당의 정체성과 위배되는 평가나 사료공개를 엄격히 통제해왔다.[28] 이러한 경향

『美帝國主義是發動朝鮮戰爭的罪魁禍首』(平壤: 外文出版社, ...; 허종호,『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허종호, 전영률, 강근조, 리정인, 리준항,『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이 책은 ... 서두에서 "조선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었다.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고 주장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시작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었다는 허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26 허종호,『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강만길,『강만길 자서전: 역사가의 시간』(서울: 창비...

27 2010년 10월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전쟁 개전 60주년 좌담회에서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習近平)의 이러한 발언이 논란을 빚자 3일 후인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이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론(定論)"이라고 재확인했다. 『조선일보』, ...

28 쉬쩌룽(徐澤榮, Xu Zerong)은 1998년 옥스퍼드대학에서 6·25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의 개입

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보여진다.[29]

대표적 사례는 옥스퍼드대학교에서 6·25전쟁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데이빗 쑤이(David Tsui, 徐泽荣, 쉬쩌룽, 1954~) 투옥사건이다. 쑤이 박사는 중국공산당의 6·25전쟁 참전결정과 관련해서 1950년대에 출판된 중국공산당 문서들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13년 형을 선고받고, 2011년 출옥했다. 그의 논문은 2011년 『中國의 6.25戰爭 參戰』으로 출판되었고, 2015년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Korea: Its Origins and Objectives* 이라는 영문책으로도 출판되었다.

이 책들에서 쑤이 박사는 1949년에 완결되는 모택동의 집권과정이 중국공산당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자주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스탈린의 후원을 통해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중국공산당의 6·25전쟁 참전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지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했기 때문에 참전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쑤이 박사의 연구결과는 마오쩌둥이 불가피하게 파병한 것이 아니라 6·25전쟁 개전 당시부터 개입했었다는 국제학계의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쑤이 박사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은 한반도 6·25전쟁의 역사를 사실에 입각해서 성찰하기 보다는 또 다른 전쟁에 대비한 정신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영화를 활용해서 공산주의적 평가를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6·25전쟁 관련 영상물로는 1956년작 '상감령'(上甘嶺) 등이 꾸준히 제작되어 왔지만 당시에는 주로 국내용이었다. 2017년 3월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전영산업촉진법' 이후 막대한 예산이 공산주의적

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열람금지된 자료들을 복사하여 유출한 것이 "심각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의 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1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1년 6월 석방되었다. 데이빗 쑤이(徐澤榮), 『中國의 6.25戰爭 參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Chak Wing David Tsui,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Oxford: University of Oxford, 1998).

29 저우언라이 등이 파병을 반대할 때, 대만과 '조선반도' 양쪽에서 위협을 받는 지정학적 상황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마오쩌둥의 파병 결정을 옹호했고,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으로서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펑더화이(彭德懷, 1898 - 1974)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10대 장군들 중 한 명으로 기념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부친 시중쉰(習仲勳)은 국공내전 기간 중 펑더화이를 도와 시베이(西北)에서 국민당 군대에 대승했다. 이후 동북변방군사령관(東北邊防軍司令官) 가오강(高崗)이 동북왕(東北王)이 되었다면, 시중쉰은 서북왕(西北王)이 되었다. 우밍, 송삼현 옮김, 『시진핑평전』 (서울: ...

평가를 담은 6·25전쟁 영화에 투입되고 있고, 제작진과 유통망을 전 세계 영화산업과 연결시키고 있다. 약 2,300억을 썼다는 영화 '장진호'(長津湖)는 이렇게 제작, 개봉되었다.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국영 CCTV는 '압록강을 건너'(跨過鴨綠江)라는 40부작 드라마도 방영했다.[30]

중국공산당의 6·25전쟁 '영상공정'은 2002년에 시작된 '동북공정'을 연상시킨다. '동북공정' 논란 당시 한국 사회의 여론은 2003년 출범했던 노무현정부의 외교정책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친 바 있다.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이 만들어졌고,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개편되어 지속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6·25전쟁 영상공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산주의적 평가를 유포하는 총성없는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첫째, 개전주체에 대한 모호한 평가. 1992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의 우방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댓가로 전쟁을 남쪽에서 일으켰다는 허위선전은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이 폭발"했다는 식으로 개전주체에 대한 인식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파병사유에 대한 일방적 평가. 미군이 38선 이북으로 북진했고, 압록강 월경 폭격을 했기 때문에 1951년 10월 중국공산당이 불가피하게 파병을 결정했다는 평가를 유포하고 있다. 마오쩌둥은 6·25전쟁 발발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김일성의 개전의지를 후원했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 국군을 낙동강 이남으로 밀어붙일 때에 이미 병력을 만주로 이동하며 파병을 준비하고 있었다.

셋째, 오직 미군과의 전쟁이었다는 평가. 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만든 6·25전쟁 영화 '금강천' 수입 논란이 있을 당시 이 영화에 한국군이 나오지 않고 미군만 나와서 문제없다는 옹호론이 개진되기도 했다. 사실은 한국군이 없는 것이 더 문제였다. 대한민국의 존재를 무시하고, 오직 미국만을 상대로 한 전쟁처럼 오도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화 '장진호'에서도 마찬가지다.

넷째, '정의의 전쟁'이었다는 평가. 공산진영이 서울을 다시 점령한 직후인 1951년 2월 1일 국제연합(UN)은 베이징정부를 "침략자"(the aggressor)로 규정했었다. 이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사회 진출은 오랫동안 지체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내 일각에서도 한반도 파병에

30 https://www.youtube.com/watch?v=rwqUyTBoXFg (검색: 2024.6.10.).

대한 반성이 있었다.

그런데 시진핑 집권 이후 노골적으로 파병을 미화해오고 있다. 그의 아버지 시중쉰(習仲勳)이 6·25전쟁 당시 파병군대를 이끌었던 펑더화이(彭德懷)와 정치적 성쇠를 같이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2020년 10월 파병기념일을 맞이하여 "정의의 전쟁"이라고까지 칭송하자 캐나다 조야에서는 "나치의 폴란드 침공을 기리는 것과 같다"[31]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작 한국 민, 관, 군의 대응은 미미했다.

2-2. 반공주의적 평가의 기여와 한계

6·25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평가의 반대편에는 반공주의적 평가가 존재했다. 자유민주주의에 비해서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는 방어형의 사유체계이다. 반공주의는 〈도표1〉과 같은 세계 냉전체제에서 공산주의적 평가의 침투와 확산을 봉쇄하는데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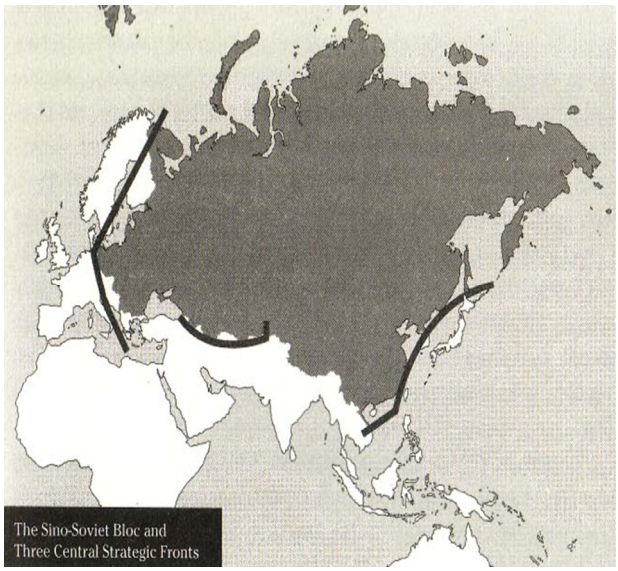


도표1. 6·25전쟁 이후 세계적 냉전체제와 한반도 정전체제
(출처: Z.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삼인))

31 『조선일보』 2020년 10월 31일.

그러나 1977년 한국에서 반공교육에 종사하고 있던 한 지식인은 반공주의적 도그마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반공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와 '부정'으로 일관하는, 구호와 성토 위주의 교육이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감정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철저히 미워하고 배격하면서도,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하는가 하는 극히 초보적인 물음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32]

요약하면 '반공'이 하나의 주의(主義, 도그마)로 굳어져서 전수되었을 뿐 왜 '반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과 사유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와 부정으로 일관하는, 구호와 성토 위주의 교육"은 6·25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선전과 평가를 봉쇄하는데 기여했으나 6·25전쟁에 대한 학문적 규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임으로써 이후 서술한 반-반공주의적 평가에 대응하는데 취약했다.

한국 학계에서 6·25전쟁에 대한 반공주의적 평가는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1990년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 1991년 소련 해체 등으로 이어지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승리를 구가하는 듯 했다. 그러나 1992년 중화민국(이후 대만)과의 '비외교적 단교' 및 중화인민공화국 및 베트남인민공화국과의 수교과정에서 반공주의의 기반은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역사적 진실에 기초한 정확한 정리와 후속 조치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나 베트남공산당 사관이 한국사회에서 수용, 확산되고, 반-반공주의적 평가가 만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6·25전쟁에 대한 반공주의적 평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식민지 경험에서 벗어난 제3세계 지식인들을 설득하는 데도 한계를 보였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지식인들에게 영-미 진영과 싸우고 있던 공산진영의 선전은 좀 더 쉽게 확산되었다. 인도의 굽타(Karunakar Gupta)는 공산진영의 주장대로 한국군이 먼저 북침함으로써 6·25전쟁이 일어났다는 북침론을 제기한 논문을 이른바 SSCI저널이라고 하는 *China Quarterly*에 게재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잘못된 영향(impact)을 미치고 있다.[33]

---

32 윤원구,『공산주의의 본질』(서울: 건국이념보급회 출판부, 2014[1977]), 12-13.

33 K. Gupta, "How did the Korean War Begin?" *China Quarterly* (October/December 1972); Gupta's critics in *China Quarterly*, no. 54 (1973), with Gupta's reply; K. 굽타 외,『한국전쟁

이처럼 6·25전쟁에 대한 오인이 유행하고 있는 제3세계는 [도표2]와 [도표3]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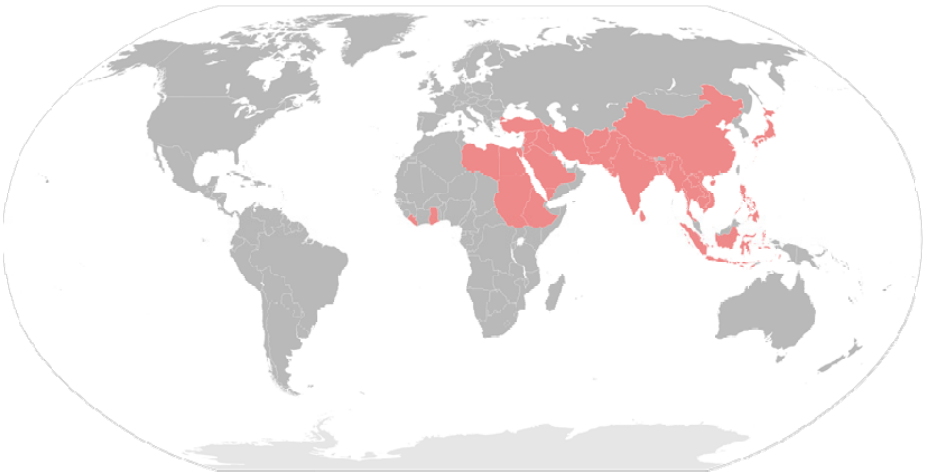


도표2. 1955년 반둥회의와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
(출처: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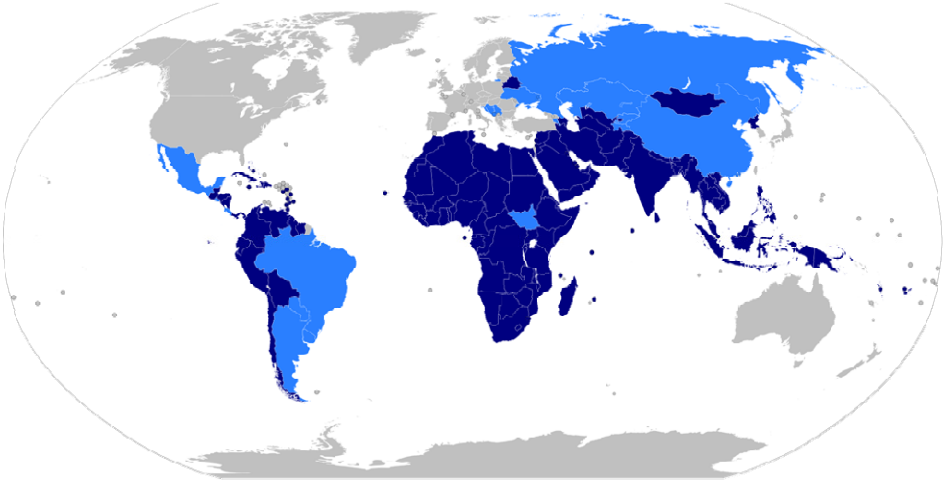


도표3. 2012년 비동맹회의 가입국들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출처: 위키피디아)

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서울: 신학문사, 1988).

6·25전쟁에 대한 반공주의적 평가는 공산주의적 평가의 확산을 봉쇄하는데 기여했지만 다음과 같은 취약점들도 갖고 있었다.

첫째, 스탈린, 마오쩌둥과 함께 6·25전쟁을 주도했던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가짜 김일성'론을 들 수 있다.[34] 1937년 보천보전투를 지휘했던 김일성이 평양의 지도자 김일성이 아니었다고 보는 '가짜 김일성론'은 후속 연구들에 의해 부정되었다.[35] 그러나 '가짜 김일성론'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36] 그 결과 평양 3대 세습독재정권의 이념적 기반과 행동양식에 대한 오판을 낳기도 한다.

1937년 보천보전투를 지휘했던 김일성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맞다. 다만 김일성과 함께 소련군복을 입고 복무했던 소련군 88여단의 부여단장이었던 세료진의 눈에 비친 김일성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레닌주의자"였다.[37] 중국공산당 휘하의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에 이어서 소련의 제88독립보병여단 제1대대장이 된 김일성은 마오쩌둥과 마찬가지로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전쟁관으로 무장했다.[38]

---

34 李命英, 『金日成列傳: 그 傳說과 神話의 眞相糾明을 위한 硏究』 (서울: 新文化社,... ; 李命英, 「在滿 韓人共産主義運動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5 김일성에 관한 연구자들의 시각적 차이에 대한 비교적 고찰로서는 김명섭, "해방 전후 북한현대사의 쟁점," 『解放前後史의 認識VI: 쟁점과 과제』 (서울: 한길사, 1989): 125-32. 또한 서대숙(徐大肅), 『김일성: 북한의 지도자』 (서울: 청계연구소, 1989); 이재화,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서울: 백산서당, 1988); 『북한해방직후 極秘 자료: 조선공산당과 김일성에 관한 문서』 (서울: 고려서림. 1998); 서대숙 편. 『북한 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3권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4);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이종석 역,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이기봉, 『人間 金日成 그의 全部』 (서울: 吉韓文化社, 1989);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김일성 자신의 회고로는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8 (평양: ...

36 2024년 4월 6일에도 미국의 VOA방송은 김일성이 가짜라고 보았던 1952년 미국 CIA기밀문서를 비평없이 보도했다. https://www.voakorea.com/a/7558962.html (검색: 2024.6.4.)

37 세료진 증언(1951년, 하바로프스크), 코로트코프, 『스탈린과 김일성』, ...

38 1941년 6월 22일 새벽 4시 독일이 소련을 향해 바바로사작전을 개시하자 소련 정부는 항일연군이 주축이 된 여단 창설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1942년 7월 16일 극동전선군 사령관 I. R. 아파나센코는 원래 2개의 야영을 해소하고, 야영이 있던 비야츠코예 나 아무르 마을에 88중조여단을 결성하라고 명령했다. 기광서,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 『역사와 현실』 28 (1998). 김일성의 집권과정과 소련의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Andrei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60

공산주의자로서의 김일성은 소련으로 이주했고, 1941년에 체결된 일소중립조약에 따라 1945년까지 일본과 교전하지 않았다. 만일 김일성은 민족주의자였다고 한다면 소련군 장교로 안주하고 있기 보다 중국 방면으로 가서 일본군과 계속 교전했어야 할 것이다. 이 기간 중에 약 3백명의 한국광복군 중 약 10명은 인도-버마전선에서 영국군과 함께 일본군에 대한 선무공작과 포로심문에 참여했다. 더 많이 참전한 한인들은 미주 한인들이었다. 이들은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습한 이후 약 7백만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동안 참전했고, 그 중 이순용(李淳鎔), 정운수(鄭雲樹), 장석윤(張錫潤) 등은 한반도 해방 이후 미군정, 대한민국 독립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다. 이들은 일부 한국사학자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영어를 잘했거나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경력으로 인해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중용될 수 있었다. 재미한인들의 미일전쟁 참전사실이 외면됨으로써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부정확한 이분법이 더욱 횡행하게 되었다.

둘째, 반공주의적 도그마는 6·25전쟁 이전의 무장충돌이나 6·25전쟁 중에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피해에 대해 소홀했다. 그 결과 보편적 인권담론과 대한민국 안보담론이 불필요하게 대립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반공주의적 관점에서는 6·25전쟁 이전 좌우대립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모두 공산주의자 내지 친공산주의자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제주 4.3사건은 남조선로동당이 폭력투쟁 노선을 채택하여 전개된 5.10총선거 반대투쟁으로 시작되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양민희생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해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고한 희생자들이나 그 유족들이 똑같은 공산주의자들로 취급되면서 연좌제 등에 의한 이중적 피해를 입고, 반대한민국 담론에 휩쓸리는 현상도 나타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4.3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이 구성되었다.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덕구가 소지하고 있던 "제주도 인민 유격대 투쟁보고서"를 비롯한 제주 4.3사건 관련 자료들을 취합한 임시자료집 12권이 편찬되었고,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 채택되었다.[39]

(New Brunswick, New Jersey: ...; 김국후, 『비록 평양의 소련군정: 기록과 증언으로 본 북한정권 탄생비화』 (서울: ...

39 반공주의에 의해 가려진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해원의 문제가 부각된 나머지 역사적 규명에는 소홀했다는 작성참여자의 증언에 관해서는 나종삼,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을

반공주의적 평가는 제주 4.3사건에 관한 반-반공주의적 평가의 범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대응적 연구들이 있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40]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새로운 증언은 당시 남조선로동당 당원으로 활동했고, 일본으로 밀항하여 1950년 일본공산당에 입당했다 탈당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남조선로동당원으로서 4.3사건의 초기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김시종은 5.10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한 "투표의 거부의 증거로서 마을사람들을 대거 입산시켰"던 남조선로동당의 전술이 "4.3의 비극을 참극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사실을 증언했다.[41]

반공주의적 평가는 거시적으로는 옳았지만 미시적으로는 국민보도연맹사건, 거창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이승만 대통령의 6·25전쟁 시기 연설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능동적으로 규명하고, 해원하는 데 소홀했다.[42] 과거사를 미봉할 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의 선행성(先行性)과 잔혹성을 소상히 규명하고, 기록하는 학문적 작업 역시 부족했다.

셋째, 반공주의적 평가는 6·25전쟁 시기 송환불원포로를 반공포로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6·25전쟁 시기 월남민들을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해서 월남한 것이라고 일반화함으로써 사상적 대립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 송환불원포로들 중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해서라기 보다 고향이 남쪽이라서 북쪽으로의 송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시되

돌이켜 보면서," 현길언, 『정치권력과 역사왜곡』 (서울: ...

40 김광동 외, 『제주 4.3사건의 본질과 「제주 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문제점 연구』 (서울: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 김영중, 『남로당제주도당 지령서 분석: 1947년 3.1운동 기념투쟁 당시』 (서울: ...

41 김시종, 『조선과 일본에 살다』 (서울: ...

42 국민보도연맹사건에 관해서는 국민보도연맹의 창설 경위, 그리고 6·25전쟁 발발 이후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참상에 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 거창사건에 관해서는 한인섭,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국민방위군 사건에 관해서는 국민방위군 사건에 관해서는 김세중, "국민방위군사건," 유영익 외, 『한국과 6·25전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남정옥, 『6·25전쟁 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박환, "국민방위군 연구: 유정수 일기를 중심으로," 『전쟁과 유물』 제6호 (2015) 등을 참고. 이승만 대통령의 6·25전쟁 시기 연설에 관해서는 김명섭, 김민식, "전쟁과 연설: 6·25전쟁 시기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보』, 56집 1호(2022) 참고. 이승만 대통령의 6·25전쟁 시기 연설은 1회의 영어연설이 더 확인되어 280회 이상이 확인되었다.

었다. 그리고 전쟁 중의 월남민들 중에는 북쪽의 공산주의 체제를 반대해서라기 보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할 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남하한 경우를 포함해서 보다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무시되었다.

넷째, 반공주의적 평가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명확히 구별하는데도 미흡했다. 20세기 전쟁과 혁명의 역사에는 반공좌파도 존재했고, 우파 사회주의도 존재했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후자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별되었다.

(1) 1917년 이전 유럽 사회주의자들 대부분의 견해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보통선거권 확대를 통한 개혁과 진화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즉, 사회민주주의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공산주의적 흐름은 당대 유럽 사회주의의 주요 흐름과 구별되는 예외적 현상으로 인식되었다.[43] 이러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동류(同類)라기 보다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들불'처럼 번지던 공산주의를 차단하는 '맞불'의 의미가 있었다.[44]

(2) 공산당 스스로 사회당과의 명확한 구별을 천명했다. 레닌이 1919년 창설된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의 제2차 세계대회(1920년 7-8월)에서 결정한 '코민테른 가입조건 21개조'에는 민주집중제에 기반한 공산당(Communist parties)으로의 명칭 단일화, 즉 사회당이라는 명칭의 폐기가 요구되었다. 이후 사상과 정치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와 명확히 구별되었다.[45]

당시 독일 사민당 이론가로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정변을 비판했던 카우츠키(Karl Kautsky, 1854~1938)는 레닌의 '코민테른 가입조건 21개조'가 나오기 이전인 1918년에 이미 볼세비키가 "3월 혁명[러시아달력으로는 2월 혁명]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쟁취했던 민주주의를 폐기"함으로써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Sozialdemokrat)라고 부르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들을 "공산주의자"(Kommunist)로 칭하고 있음을 지적했다.[46] 레닌이 이끌던 볼세비키와

---

43 Walter Laqueur, *The Dream That Failed: Reflection on the Soviet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44 실제로 유럽의 사회주의는 1917년 이후 공산주의에 대한 경쟁 또는 대결의식을 통해서 자유주의적 가치를 확인하고 민주주의를 긍정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로 발전했다. 셰리 버먼, 『정치가 우선한다: 사회민주주의와 20세기 유럽의 형성』, 김유진 역. (서울: ...

45 Jane Degras, ed., *The Communist International Documents*, vol. 1(1919-1922)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168-72; Richard Pipes, *Communism: A History* (New York: A Modern Library Chronicles Book, 2001), ix-; 와다 하루끼, 『역사로서의 사회주의』, 고세현 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

46 카를 카우츠키,『프롤레타리아 독재』, 강신준 역 (파주: ...

경쟁했던 멘세비키는 모두 제2인터내셔널 하에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Russian Social Democratic-Labour Party)의 일원이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레닌과 볼세비즘을 칭할 때 공산주의 대신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전복했던 2월 혁명정부 내 다수파가 사회주의 혁명당(SR, Партия социалистов-революционеров)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사회주의 혁명당은 볼세비키에 반대하는 반공투쟁의 선봉에 섰다. 약 5백만 명 이상이 사망한 러시아내전에서 공산군에 반대한 것은 짜르의 복위를 시도했던 세력(공산군은 이에 맞서 짜르 니콜라이 부부, 황태자, 공주 등을 학살)만은 아니었다.

(3) 공산주의와 달랐던 또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섰던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반공'을 전면에 내세운 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극력 반대하는 사상이기도 했다. 우파사회주의를 '진정한' 사회주의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이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파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교정 내지 궁극적 진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것은 사실이다.

반공주의적 도그마가 강했던 시절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자들 중 일부를 서훈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라고 부르기 보다는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반공주의적 편향과 반(反)반공주의적 편향을 모두 넘어서 당시의 공산주의자들을 스스로가 표방했던 그대로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명명이 될 것이다. 코민테른에 대한 최신의 연구들에 입각하여 국제공산주의가 코리아 공산주의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있었던 그대로' 인식하고, 서술해야 6·25전쟁의 배후에 존재했던 폭력적 공산주의와 현재의 안보위협이 정확히 포착될 수 있다.

3-3. 반-반공주의적 평가의 확산과 안보위협

6·25전쟁에 대한 반공주의적 관점의 한계에 대응해서, 그리고 반공이 독재를 위해 오용되기도 했던 시기에 지식인 운동 차원에서 반-반공주의적 평가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관념에 기초해서 '통일을 위한 역사,'[47] '평화를 위한 역사,' '민중을 위한 역사' 등의 목적성 서사가 범람하게 되었다.

반-반공주의적 평가가 널리 유포되는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보장받는 미국 학계가 크게 기여했다. 1964년 미국의 버클리대학에서 시작된 자유언론운동(Freedom of Speech Movement), 그리고 베트남전쟁에 맞서 1969년부터 본격화된 반전운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승만과 미 제국주의자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공산주의적 선전과 평가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던 상황에서 미국 좌파에게 코리안들끼리의 내전확대론은 대안적 평가로서 매력을 발휘했다.

1972년에 출간된 책에서 조이스 콜코와 가브리엘 콜코는 6·25전쟁이 소련이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 남북한 간의 군비경쟁,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의 북진을 두려워한 북한의 '방어적 선제공격'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48] 이러한 콜코 부부의 주장은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반전 분위기 속에서 각광을 받았지만 당시 박사과정생이었던 윌리엄 스툭에 의해 조목조목 반박되었다.[49]

1975년 북베트남에 의해 베트남공산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페루 리마의 비동맹회의에서 평양이 외교적 승리를 거두던 국제정세 속에서 출간된 책에서 로버트 시몬스는 6·25전쟁을 내전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의 코리아내전 개입은 미국과 코리아반도 모두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50]

시몬스의 책이 출간된 지 30년 후인 2005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한국학자가 인터넷 칼럼을 통해 유사하게 6·25전쟁을 평가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51] 미

47 대표적으로 강만길은 해방 후의 현대사를 통일민족국가 시대의 전사(前史)로 보고, 그 이름 또한 '분단시대' 혹은 '통일운동시대'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강만길, "분단시대 사학의 성격,"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서울: 창작과비평사, ...

48 Joyce Kolko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pp.572-573. 가브리엘 콜코는 하버드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후 펜실베니아 대학에 재직하다가, 이 대학이 베트남전쟁에서 사용되는 고엽제 연구비를 수주한 것에 반발하다가 1970년 캐나다로 이주하여 프랑스 68혁명의 영향을 받은 요크대학의 교수가 된 지성사적 궤적을 가지고 있었다.

49 William Stueck, "Cold War Revisionism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Conflict: The Kolko Thesis,"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42, no. 4 (1973), pp. 537-60; 스툭의 연구사적 의미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옥창준, "윌리엄 스툭의 국제적 접근법과 한국전쟁 연구,"『美國學』 제39권 1호 ...

50 Robert R.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Peking, Pyong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 (New York: The Free Press, ...

국 학계에서 시몬스가 주장했던 내전론은 브루스 커밍스에 의해 계승되었다. 커밍스는 6·25전쟁이 원래 '내전'이었고,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장미전쟁(War of the Roses)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52]

시몬스와 함께 커밍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아일랜드 출신의 존 핼리데이였다. 핼리데이는 1978년에 쓴 논문에서 "사실상 1945년 9월에 미국이 코리아를 침략했다"(The US, in effect, invaded Korea in September 1945)고 주장했었다.[53] 1986년에는 알바니아의 공산 독재자 엔베르 호자의 회고록을 공동집필했다.[54]

1988년에는 브루스 커밍스와 함께 6·25전쟁에 관한 책을 출간하여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55] 이 책에서 핼리데이와 커밍스는 1950년 6·25전쟁은 1949년 여름 38선 상에서 있었던 수 차례의 접전과 게릴라전이 확대된 것이라는 내전확대설을 개진했다. 이 책에서 핼리데이와 커밍스는 김일성뿐만 아니라 이승만도 전쟁을 원했고, "이승만은 종종 주인이 줄을 잡고 있는데도 목걸이에 걸려 거의 질식할 정도로 뛰어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냥개처럼 보였다"고 묘사했다.[56]

그런데 커밍스와 공저하기 직전인 1986년 핼리데이는 장융과 함께 송경령 전기를 공저했었다.[57] 그리고 2005년에는 다시 장융이 제1저자로 집필한 마오쩌둥 전기에 제2저자로 이름

51 강정구,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 당시 이 칼럼이 사회적 논란을 빚자 저자는 2005년 8월 2일 자신의 간단한 소회와 함께 칼럼전문을 향린교회 게시판에 다시 게재하였다.
http://www.hyanglin.org/bbs/23720 (검색일: 2016년 8월 15일).

52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W.W. Norton, ...

53 핼리데이의 주장처럼 미군은 코리아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코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제국을 공격하여 코리아를 해방시킨 것이다. Jon Halliday, "Observations on the Presentation and Perception in the West of the Korean People's Struggles," in Korea, *North and South: The Deepening Crisis*, rev. and expanded version of Crisis in Korea, ed. by Gavan McCormack and Mark Selden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54 Jon Halliday, *The Artful Albanian: The Memoirs of Enver Hoxha* (Chatto & Windus 1986).

55 Jon Halliday and Bruce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Pantheon, 1988).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은 브루스 커밍스、존 할리데이 지음, 차성수、양동주 옮김,『한국전쟁의 전개과정』(서울: 태암, 1989).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될 당시 핼리데이는 한국을 방문하여 대담록을 남겼다. 존 할리데이, "한국의 분단-전쟁, 누구의 책임인가?,"『역사비평』...

56 Jon Halliday and Bruce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London: Viking; New York: Penguin, 1988); 브루스 커밍스·존 할리데이, 차성수·양동주 역,『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을 올렸다. 이 책에서 핼리데이와 장융은 20세기 최대의 대량학살자는 히틀러나 스탈린이 아니라 마오쩌둥이라고 썼다. 마오는 "평화시에 약 7천만에 달하는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58] 이처럼 마오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장융과 핼리데이는 "왜 마오와 스탈린이 코리아전쟁을 시작했는가?"(Why Mao and Stalin Started the Korean War)"[59], "마오쩌둥이 코리아전쟁을 통해 어떤 이익을 짜냈는가(milk)"[60]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당시 마오쩌둥이 가지고 있던 속셈을 냉철히 분석했다.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될 당시 핼리데이는 1988년 자신이 커밍스와 함께 출간했던 6·25전쟁 관련 저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61]

1989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핼리데이의 인생 궤적은 반공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진실을 추구했으나 반-반공주의의 덫에 걸린 연구자들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핼리데이와 커밍스가 공저했던 6·25전쟁사에서 보여지는 반-반공주의적 도그마는 반공주의를 명목으로 자행된 폭력에는 주목하면서도 공산주의에 의해 추동된 폭력은 외면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낳았다.

미국학계에 의존적인 한국학계에서 빠르게 유포된 커밍스 류의 반-반공주의적 평가는 반공주의에 대한 공격에 치중한 나머지 그 자체가 반공주의처럼 하나의 '주의(主義, 도그마)'가

57 Jung Chang and Jon Halliday, *Madame Sun Yat-sen: Soong Ching-ling* (London: Penguin, 1986). 장융은 이 책을 쓴 이후 Wild Swans이라는 책을 단독으로 출간했고, 1천만부 이상 판매되었다. Jung Chang, *Wild Swans: Three Daughters of China* (London: ...

58 Jung Chang and Jon Halliday, *Mao: The Unknown Story* (New York: Alfred A. Knopf, ...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장융, 존 핼리데이, 『마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상, 하. 황의방, 이상근 외 옮김 (서울: 까치, 2006). 마오쩌둥의 주치의도 마오의 신화를 벗기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Li Zhisui, *The Private Life of Chairman Mao* (New York: Random House, 1994). 네덜란드 출신의 홍콩대학 석좌교수 프랑크 디쾨터가 중국공산당 문서들을 활용하여 쓴 일련의 저작들 역시 이러한 평가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Frank Dikötter, *Mao's Great Famine: The History of China's Most Devastating Catastrophe, 1958-1962* (London: Bloomsbury, 2010); *The Tragedy of Liberation: A History of the Chinese Revolution 1945~1957* (London: Bloomsbury, 2013); T*he Cultural Revolution: A People's History, 1962-1976* (London: Bloomsbury, 2016).

59 Chang and Jon Halliday, *Mao,* ...

60 Chang and Jon Halliday, *Mao,* ...

61 핼리데이가 이처럼 자신의 종전 입장을 바꾸게 된 데는 장융의 영향이 컸다고 보여진다. 장융은 중화인민공화국 쓰촨 성 이빈 시에서 1952년에 태어나, 문화대혁명의 광란을 겪고 1978년 가까스로 유학을 떠나 중화인민공화국 출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가 직접 체험한 중국공산당 치하에서의 현실경험이 동아시아의 현실과는 유리된 채 무리한 주장을 개진했던 아일랜드 출신 좌파 지식인이었던 핼리데이의 입장을 변화시켰다고 보여진다.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자유진영에서 공개된 사료에 나타난 자유진영의 전시 과오들을 들추어 전쟁의 성격 전체를 규정했다.[62] 그 결과 자유진영 내부의 '반공좌파'[63]까지도 견지했던 '사상으로서의 반공'이 지녔던 역사적 의미를 무조건 배격하고, 또 하나의 도그마가 되어 반공주의적 평가 보다는 공산주의적 평가로 경사되었다.

반-반공주의적 평가에서는 6·25전쟁을 "통일을 위한 전쟁"으로 보면서 그 통일이 "공산화 통일"이라는 점은 제대로 지적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평가는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흡수하려 했던 사실을 민족주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25전쟁을 누가 먼저 일으켰는가를 묻는 것은 화해협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반공주의적 평가는 전쟁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또 다른 안보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3. 결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지속된 6·25전쟁은 국제공산주의적 연대에 기초해서 시작되었다.[64] 그것은 1917년 러시아에서 케렌스키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볼세비키의 집권 이후 유라시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관념충돌의 축소판(microcosm)이었다. 이러한 관념충돌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과 일본의 우익전체주의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는 과정에서 잠복하기도 했으나 1945년 공동의 적이 사라짐에 따라 미-소 양 진영 간의 냉전으로 전환되었다가 한반도에서 6·25전쟁이라는 열전으로 표출되었다.

조선인민군은 미군의 빠른 참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전선까지 밀어붙였다. 1950년 6·25전쟁 당시 한반도는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제2차 세계대전 승전연합국 사령관(맥아더 원수)의

62 쉬쩌룽(徐澤榮, David Tsui)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중국공산당의 사료통제는 엄격하다. 소련군 총참모부 정보총국(GRU)자료를 포함한 구 소련의 사료공개도 여전히 미흡하다.

63 좌파이면서도 '반공'의 입장을 견지했던 프랑스사회당의 노선 등으로 대표되면, 죠지 오웰(George Orwell, 본명 Eric Arthur Blair, 1903–1950)과 같은 이론가도 이에 해당된다.

64 6·25전쟁 발발 직전 소련과 연대한 해양위협도 새롭게 규명되었다. 김명섭·이호준, "6·25전쟁 이전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해군정책, 1948-1950,"『국제정치논총』 제62집 4호(2022).

관할 하에 있었기에 미국과 소련 승전국들 간에 국제적으로 합의되었던 38선을 침범한 행동에 대해 선전포고나 미국 의회의 비준없이 일본 주둔 미군의 신속한 경찰행동(police action)이 가능했다(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으로서 일본에 머물러 있던 오스트레일리아 공군기 포함). 1953년 이후 한반도는 6·25전쟁이 정지된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쟁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또 다른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전쟁사가 쓰여져야 하는 이유다. 로마를 비롯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많은 나라들은 외부의 공격을 받기 앞서 내부적으로 이미 와해되어 있었다.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위협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6·25전쟁사에 대한 잘못된 선전과 평가의 확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 6·25전쟁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는 식의 반공주의적 평가만으로는 범람하는 반-반공주의적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6·25전쟁에 대한 반-반공주의적 평가는 역사가 어떻게 정치와 결합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정치학적 연구주제이다. 전쟁의 전체상을 보지 않거나 고의로 은폐하면서, 특정한 사실만을 부각시켜 전쟁을 평가하면 마치 눈을 가린 채 코끼리의 꼬리만을 만지면서 뱀과 같다고 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6·25전쟁이 "이승만도당과 미제국주의자들"이 일으켰지만 "정의의 반격전"을 통해 조선반도를 통일하기 직전 "맥아더 원쑤"에 의해 통일이 저지되었다는 공산주의적 평가와 선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만 없다면 조선인민군 단독으로 통일된 조선을 만들 수 있다는 식의 전쟁 교육이 꾸준히 계속되어온 것이다. 9천만 당원을 거느린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평가와 선전을 방조해왔다.

북핵 위협이 경성 위협(hard threat)이라면 6·25전쟁에 대한 잘못된 선전과 평가는 한국민과 한국군의 안보의식을 와해시키는 연성 위협(soft threat)이 되고 있다. 6·25전쟁에서 지켜지고, 전쟁을 통해 재탄생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경성위협은 물론 연성위협에 합당한 민, 관, 군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문】

김 낙 진(전쟁기념관 학예부장)

먼저 김명섭 교수님의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께서는 6·25전쟁에 대한 기억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억공동체의 플랫폼을 형성해 왔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인식이 지금 존재하는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중요한 대처 중에 하나임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동안의 6·25전쟁에 관한 연구들은 해석의 범주를 전통주의-신전통주의와 수정주의-신수정주의라는 틀에 입각하여 왔는데, 이러한 분석틀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이루어진 6·25전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산주의, 반공주의, 반-반공주의라는 범주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발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러한 범주의 6·25전쟁 평가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케 하는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6·25전쟁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연성위협으로서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특히 반-반공산주의적 평가의 확산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셨다고 생각됩니다.

Ⅱ에서는 공산주의적 평가와 반공주의적 평가, 반-반공산주의적 평가에 대한 각각의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Ⅱ-1의 공산주의적 평가의 핵심은 6·25전쟁 발발의 책임을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승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으로 6·25전쟁이 대한민국의 북침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전쟁관을 계승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공산당, 소련공산당의 6·25전쟁에 대한 왜곡의 실태를 설명하였고, 2000년 6·25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역사학자협회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6·25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선전과 평가를 교정하는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교수님의 설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6·25전쟁에 대한 평가인데, 1950년 10월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조선인들 간의 '내전'으로 이후를 '항미원조전쟁'으로 구분하면서

자신들의 참전을 '정의로운 전쟁'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이 시진핑의 중국은 한반도 6·25전쟁의 역사를 사실에 입각한 성찰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에 대비한 정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화 등을 주요 매개체로 하여 공산주의적 평가를 유포한다고 하며 이를 '영상공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 보면 동북공정 등 중국이 전통시대의 역사왜곡에 열을 올리다가 이제는 6·25전쟁에 대한 왜곡과 선전으로 그 역사공정을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역사공정에 대해 경각심을 크게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해석이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많이 스며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결국 사실에 기반 한 6·25전쟁사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왜곡된 해석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6·25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공정에 대비한 대책이나 방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Ⅱ-2에서는 반공주의적 평가의 기여와 한계를 다루면서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어형 사유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공산주의적 평가의 침투와 확산을 봉쇄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는 한편 반대와 부정으로 일관하고 구호와 성토위주의 교육에 집중하다보니 6·25전쟁에 대한 학문적 규명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였고, 반-반공산주의적 평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짜 김일성'론 등 잘못된 주장, 6·25전쟁 중에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피해에 소홀했던 점, 6·25전쟁 시기 송환불원포로 및 월남민 등에 대한 단순한 해석,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구별의 미흡 등을 지적하셨다. 이러한 단점들은 이후 반-반공산주의적 평가의 확산을 낳고 종국에는 안보위협에까지 이루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공주의적 평가가 유행하던 시기의 분위기가 이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가로막았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Ⅱ-3 반-반공주의적 평가의 확산과 안보위협에서는 내전론이 미국학계에서 공산주의적 평가의 대안적 평가로 자리매김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반공산주의적 평가는 반공주의를 명목으로 자행된 폭력에는 주목하면서 공산주의에 의한 그것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고, 나아가 반-반공주의적 평가가 또 다른 도그마가 되어 반공주의적 평가보다 오히려 공산주의적 평가로 흐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것은 6·25전쟁을 '통일을 위한 전

쟁'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공산화 통일임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는 문제점, 나아가 화해협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또 다른 안보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반공주의적 평가와 반-반공주의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쟁기념사업회가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자료의 국제적 수집사업이 향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6·25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큰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질문은 왜곡되지 않은 역사적 실체에 접근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자료의 확보와 비판적 분석이 전제되어야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전쟁기념관의 6·25전쟁 전시실에는 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해 단순한 주의주장을 넘어 객관적 증거들을 역사적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 소련의 교과서, 남침을 증명할 소련의 외교문서, 북한의 남침명령서 등을 함께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인 관람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전시내용은 차곡차곡 중국의 6·25전쟁 왜곡을 위한 역사공정에 중요한 대응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께서 발표문에 잠깐 언급했듯이 전쟁기념관의 6·25전쟁에 대한 학술·전시 및 교육 발전에 관한 조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문】

손 경 호(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6·25전쟁 연구를 정리한다는 것은 많은 고민과 망설임을 동반하는 작업이다. 김명섭 교수님께서 밝히셨던 대로 다른 관점에 따른 연구들이 번갈아 가며 시대적 조류를 형성하였고 중요한 사료가 공개되는 추세에 맞추어 연구가 증감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6·25전쟁에 접근하는 방식도 거시적 접근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접근이 관심을 끌기도 하고 정치나 군사를 넘어선 성,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 관심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 추세와 달리 외국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쟁 수기가 인기를 끄는 대중적인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언뜻 보면 다양한 접근 방식과 주제가 존재하는 6·25전쟁 연구가 고민과 망설임을 동반한다고 했던 것은 이 전쟁이 지닌 의의와 비중을 반영한 전쟁 연구의 관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명섭 교수님이 발표하신 이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6·25전쟁의 본질을 잘 짚어내 가장 적절한 분류방식에 따라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였다. 이 논문은 그동안 미국 학계에서 사용되어 표준적인 분류방식으로 자리 잡다시피 한 전통주의-수정주의-후기 수정주의식의 분류가 가진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공산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반-반공주의식 접근을 과거 연구를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서론에서 필자가 제기한 대로 기억의 공동체로서 국가가 지닌 정체성을 인식하여 6·25전쟁이 가진 의미를 기준으로 전쟁을 이해하는데 유효한 방식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닌 "가장 큰 기억의 조각"을 형성한 이 전쟁은 지금까지 전쟁이 영향을 미치고 한국 사회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충돌하는 관념에 따라 이해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 논문에 의하면 처음 제기된 관념적 이해는 공산주의적 해석을 따르고 있으며 이 관점은 날조된 반공격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유포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별히 사르트르는 그가 향유했던 프랑스 청년들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적 해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논문은 단순히 공산주의적 해석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적·

국가적 상황에 따른 해석의 변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중국이 공산주의적 해석을 통해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나 정치적 요소로 인해 발생한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해 냈다.

이 연구의 심층적인 분석은 전쟁에 대한 반공주의나 반-반공주의 관점의 연구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그 결과 반공주의 관점이 범한 가짜 김일성론이나 국가권력 행사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던 도그마,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혼동한 미숙했던 전후 한국 사회의 인식이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비판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가 전쟁에 대해 모호한 인식을 갖게 만든 커밍스류의 반-반공주의 관점을 저류로부터 과정, 중요 행위자의 행적을 통해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역사 속에 나타난 개인의 삶과 역할을 무겁게 보는 교수님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가 선정한 관념 충돌 중심의 접근에 동의하며 소개된 논점과 그 해석에도 동의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논점을 제기하여 이 연구의 논의를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관념 충돌의 관점이 시작하는 시점을 공산주의적 관점보다는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떠할지 제안한다. 물론 공산주의적 관점이 의도적으로 전쟁 초기부터 제시되었고 1952년부터 활자화되어 소개되었지만, 초창기에 전쟁 자체를 소련이 주도하였다고 보는 시각이 초창기에 일반적이었기에 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사회에 반-반공주의가 들어선 틈을 내어준 것이 전쟁에 대한 정교한 설명력을 결한 반공주의가 만연하였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순서가 적합해 보인다. 전쟁이 발발한 1-2년 사이에 두 관점이 경합하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순서는 반공주의와 공산주의 순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쟁 개입에 관한 부분이다. 중국은 전쟁에 투입한 전력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였다. 문제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과 실제 전쟁 개입을 결정하고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충분히 동북지역에 군사력을 건설할 이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전쟁에 실제 개입하는 것은 복잡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전쟁 개입의 목적과 전략이 이에 수반한다. 만일 이전부터 전쟁 개입을 추진하였다면 전쟁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되어야 한다. 초기 개입 결정설에 의하면, 중국은 처음부터 북한이 위기에 처하면 원조할 작정으로 전쟁을 계획했어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군사력은 그보다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오쩌

둥이 호언했던 대로 중국은 전쟁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시기에 작용한 직접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전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마오쩌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시대적 필요를 잘 반영한 '관점에 따른 연구' 분류 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와 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예로 보여, 결과적으로 후속 연구의 방향도 훌륭하게 제안하였다. 토론자로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귀한 연구를 읽고 토론할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친다.

북한의 핵 위협과 대남 정책 전망

박 원 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1. 김정은의 전쟁할 결심

◎ "만일의 경우 발생할수 있는 핵위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8기 9차 전원회의, 2023.12)

◎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 지당한 조치"(건군절 연설, 2024.2.9)

◎ 김정은 발표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북한은 통일노선포기 보다는 전쟁할 결심에 보다 큰 방점

■ 북한이 상징적 '민족 지우기'는 지속하지만, 통일 포기와 관련한 북한 주민 상대로 구체 설명(노동신문 정론, 기사 등)은 부재

◎ 반면, 김정은은 한국 무력 점령 의사를 표출한 후 3월부터 현지 지도를 통해 구체적인 대남 점령 시나리오를 점검 중

■ 서해 북방한계선을 공격하는 서부지구 작전훈련기지 현지지도(3.6), 수도권 타격 임무를 부여한 포병부대(3.7), 전차부대 훈련(3.13),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3.18),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연소 실험(3.19),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4.2), 전략순항미사일과 신형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4.20),

■ 북한 대남 전쟁 시나리오

–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충돌을 야기하여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경우 북한은 이를 빌미로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나 다연장로켓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공격하고, 전차와 기갑사단을 동원해 남침 개시

– 전쟁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저위력 핵 사용

–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군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괌과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 공격용 중거리 미사일 사용

□ 대남 핵 공격 훈련

◎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체계 안에서 운용되는 훈련을 4월 22일 처음으로 진행(2024.4.23. 조선중앙통신)

■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은 국가최대핵위기사태경보인 《화산경보》체계발령시 부대들을 핵반격 태세에로 이행시키는 절차와 공정에 숙달시키기 위한 실동훈련과 핵반격지휘체계가동연습, 핵반격임무가 부과된 구분대를 임무수행공정과 질서에 숙련시키고 핵모의 전투부를 탑재한 초대형방사포탄을 사격시키는 순차로 진행"

■ 600mm 방사포(다연장로켓, KN-25)를 활용하여 전술핵 공격의 "운영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함으로써 "당중앙의 핵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

－KN-25는 "적의 작전 비행장 기능 초토화"기능을 수행, 전술핵을 탑재한 4연관 1문당

한국 공군 비행장 1개 초토화(2022.2.20. 조선중앙통신)

－한국내 주요 기지 타격용, 특히 한미공군에 대한 대응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의 구성계통인 통합화력지휘체계 가동 훈련(2024.5.31. 조선중앙통신)

■ ① 당중앙군사위원장(김정은) 결정 → ② 당중앙군사위 비밀암호지령문 전송 → ③ 해당 부대 준비 → ④ 통합화력체계 가동

■ 김정은의 지도하에 KN-25 18문을 동원하여 각 1발씩 발사, 365km 사거리로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 기지 소재지를 겨냥

■ 북한 위성발사 예고(5월 26일) 후 F-35A, F-15K, KF-16 등 약 20대 한국공군 전투기의 비행금지선(NFL·NoFlyLine) 이남 훈련에 대한 대응 훈련

－합참이 비행금지선 이남 비행을 밝힌 것은 최대치 북상한 것으로 F-35 스텔스기를 활용하여 북한 전술목표 타격이 가능하다는 경고

◎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전술핵 신속 사용을 위한 체제 구축

■ 전술핵은 작전, 전술적 상황에 따라 즉각 발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핵무기 발사 권한을 일선 부대에 위임하거나 중앙의 지시를 즉각 이행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수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북한 핵법령, 2022.9.8. 최고인민회의)

- 국무위원장 또는 국가핵무력 지휘통제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즉각 대응토록 규정

■ 북한은 신속 핵반격(선제공격 포함)을 위한 경보체계(화산)와 이를 시행하는 체제(핵방아쇠) 존재를 공개함으로써 체제 구축을 강변

◎ 북한의 전술핵 사용 체제 구축은 한계도 노정

■ 5월 30일 KN-25 발사때 북한은 화상경보체계 발동 후 핵방아쇠가 가동되는 데 4일이 걸림으로써 신속 핵반격 능력 한계 노출

■ 또한, 유일영도체제라는 북한 특성상 최고자도자의 안위와 결정만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사고 또는 도전 요소가 있는 일선 부대 핵사용 권한 위임은 사실상 불가능

- 위임된 일선 부대 지휘관이 핵을 활용하여 김정은에게 도전할 가능성 배제 불가

■ 결국, 일사불란한 하나의 체계로 연계되어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실시간 하위제대에 전달되어야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북한의 기술적·정치적 한계 상존

- 명령계통을 전달한 첨단 지휘체제 구축 난항, 체계 구축시 외부 보완 문제 등

□ 핵심질문

① 북한은 정말 전면전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② 이전과(실전 핵능력 보유 전후) 비교하여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이 변화했는가?

③ 전쟁을 감행한다면 핵을 실제 사용할 수 있을까?

□ 북한의 합리성: 선제 핵공격 가능성

◎ 현실주의, 특히 수인게임(prisoner's dilemma)에 따르면 핵전쟁 가능

■ 최선의 해법이 아닌 최악 중 차선을 선택하는 수인 게임의 특성상 핵을 사용하면 공멸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 제시

–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확실히 진다.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면 최소한 싸워서 살아남을 기회라도 있다"라는 "쓰거나-지거나"(use-it or lose-it) 상황이므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1]

■ 북한이 미국령 괌을 저위력 핵으로 공격하고, 미국 도시를 전략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창출하여 미국의 보복공격을 억제[2]

■ 비대칭적 확전: 비강대국이 선제공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강대국을 무장 해제

2. 북한 핵전략(교리) 분석

□ 북한 핵전략

◎ 북한은 핵전략을 핵무기의 '전략적' 사용에서 저위력 핵무기 개발을 통한 '전술적' 사용으로 전환 시도

■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던 북한이 2019년 이래 한국을 사거리로 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병행

– 북한은 2019년 5월 저위력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1,000km 이하의 KN-23 개발을 시작

◎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저위력 핵 타격 능력추구는 미국과 '공포의 균형' 달성 제한으로 북한이 선택한 대안

◎ 북한은 재래전과 저위력 핵교전 간 확전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를 지속

■ 전쟁 초기 재래전 상황에서도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사용하는 핵 확전이 가능함을 최

1 Vipin Narang, "Why Kim Jong Un Wouldn't be Irrational toe Use a Nuclear Bomb First," *Washington Post*, September 8, 2017.

2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도 같은 주장이다. "[워싱턴 톡] 한국 위해 미 도시 희생 어려워 vs 미국 공약 의심 말아야," Voice of America. 2024년 3월 2일. https://www.voakorea.com/a/7510924.html.

고 지도자의 발언, 핵 법령 등을 통한 제도화, 작전계획 및 훈련 등으로 강변

-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수없을 것"(김정은, 열병식연설, 2022.4.25. 조선중앙통신): '4.25독트린'혹은 북한판 '맞춤형 억제전략'(TDS)
-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 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야한다"(김정은, 2022.11.19. 조선중앙통신)
- "현재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유사시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저어하게 만들수 있는 현실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였으며 작전초기에 한국괴뢰군대의 기본공격력과 하부구조, 지휘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김정은, 국방과학원 방문 연설, 2024.5.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이를 통해 전력 열세를 상쇄

■ 한미동맹보다 열등한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압도적 핵 우위에 맞서기 위해 일종의 '비확전을 위한 확전'(Escalate to De-escalate) 추구

■ 특히, 핵무기 통제권을 현장 지휘관에 위임할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핵 사용 문턱을 최대로 낮춰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군사 대응을 제한

-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을 토의했다"(조선중앙통신, 2022.06.22)
- 전진 배치되어 한국을 우선 타격하는 이른바 '서울 불바다'부대인 전선부대에 저위력 전술핵 배치 가능성 부여

◎ 재래전 상황에서 저위력 핵무기사용 가능성을 최대치로 부각하여 한미의 군사적 선택을 제한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해서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나토의 직접 개입을 억제하는 전략을 북한이 차용

◎ 북한은 저위력 핵을 사용한 제한전 수행 능력과 의지를 최대치로 현시하여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미국의 대규모 응징보복을 초래하는 확전을 통제하

는 것이 목표

□ 저위력 핵을 사용하는 북한 핵전략의 한계

◎ 북한이 전면전이 아닌 저위력 핵을 사용한 제한적 공격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상 한계 노정

■ 그간 국내외에서 북한이 저위력 핵을 사용한 제한전을 최대위협으로 상정

◎ 북한이 전선에서 전술핵 선제 사용 가능성 제한

■ 전진 배치된 북한 포병전력에 저위력 전술핵을 배치하여 한국을 선제공격할 경우 핵 오염으로 인해 북한군의 남침을 위한 전선 돌파 제한

■ 한미가 기 보유한 대화력전 능력으로 북한 포병전력 조기 격파

－한미 공군과 정밀타격 능력은 북한의 전선 전술핵 공격과 무관하게 보존되어 대응 가능

◎ 저위력 핵미사일 사용 가능성도 한계 상존

■ 북한이 저위력 핵미사일을 사용한 제한전 수행을 목표로 하더라도 전면전으로 확전 불가피

－KN-23, 24 등을 활용한 대남 핵 공격시 (1)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기 위해서는 다량의 미사일 동시 투발 필요, (2) 한국에 유의미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큰 위력의 탄두 사용, (3) 남한 대부분이 인구 밀집 지역이므로 대규모 민간인 피해 발생, (4) 북한이 목표로 하는 타격 시설은 대부분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3]

－한국은 전장 규모가 좁아 전술-전략핵 구분이 무의미, 핵교전이 통제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 난항

■ 위와 같은 상황은 결국 전면전을 의미하므로 미국의 대규모 응징보복과 한국군의 최대치 대응을 초래하여 북한이 '확증파괴'될 높은 개연성 상존

◎ 한미는 북한에 확실한 응징보복 능력 확보

■ 북한은 핵 능력 세계최강인 미국을 상대로 최소 억제 능력 달성 난항

3 황일도, "핵확전 개념으로 본 북한 핵 실전전략화 행보의 특징," 『주요국제문제분석』IFANS, 2022-2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p. 14.

- 핵 대응의 삼대 요소인 사용 억제, 사용 시 방어, 사용 후 반격 등의 모든 측면에서 북한은 미국에 절대 열세[4]

■ 미국은 본토 공격에 대비하여 감시정찰 능력 확충, 요격역량 강화, 정밀타격 수단 증강[5]

- 예를 들어, 2020년 저위력 탄두 W76-2를 장착한 SLBM 실전배치로 북한 지휘부 정밀타격 능력 향상[6]

■ 한국은 삼축 체제를 활용하여 북한 응징보복

- F-35A,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등을 활용한 북한 지도부 정밀타격 가능

■ 후술할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 통합체계(CNI)는 북핵 억제에 효과적 수단

◎ 북한이 '희망'하는 핵전략 작동 가능성은 제한

■ 재래전에서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행위를 통해 '비대칭 위기 격상 상태'에서 우세를 선점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상술한 군사적 한계로 실제 이행 가능성 제한

■ 보다 근본적으로 확증보복능력이 없는 국가가 재래전 상황에서 저위력 핵을 우선 사용하고, 그 대상이 확증보복능력을 갖춘 국가라면 확전은 자살행위

- 향후 북한이 미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더라도 상호확증파괴(MAD) 공식은 불성립
- 전술핵을 현대화하여 선제타격 능력과 요격 능력을 확충하는 미국을 상대로 북한의 확증보복능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

---

4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멀리 이격되어 거리의 폭정(tyranny of distance) 상황이므로 북한 핵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설인효·손한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억제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23권 2호, 2023, pp. 22. 이와 같은 이유로 미 전술핵의 한국 반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하기와 같이 미국은 북한 저위력 핵에 대한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5 미국의 대북 핵 억제 능력에 대해서는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The New Era of Counterforce: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Future of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4, April 2017, pp. 9-49 참조.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핵 능력을 보유, 특히 핵 피폭 효과를 최소화한 전술핵을 사용하여 북한 핵을 파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은 확증보복능력이 부재하므로 미국이 선제공격하더라도 대응이 제한됨도 주장한다. 그러나, 선제타격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극단적 가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6 미국은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부터 저위력 핵위협 대응계획을 제시하면서 3축체계(nuclear triad)와 미사일방어체계, 저위력 핵무기 역량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 한반도 전쟁 발생시 '정권 종말'이라는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자도 김정은이므로 개인변수 차원에서 판단할 때 핵전쟁은 비합리적

3. 북한 핵 대응

□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의 응징보복 여부

◎ 북한이 한국을 저위력 핵으로 공격한 이후 확전을 통제하여 미국의 대규모 응징보복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

■ 핵무기의 파괴 능력을 감안할 때 저위력 핵이라도 전면전으로 바로 연계될 수밖에 없으므로 핵 문턱을 넘어선 이후 확전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

◎ 북한이 미 본토 공격 능력과 의지를 강화할수록 미국의 강력한 응징 가능성이 오히려 상향

■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한 후 만약 미국이 대량 응징보복에 나선다면 이에 대응하여 미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강화할수록 미국은 본토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압도적 핵 보복으로 북한 핵 능력 제거를 시도

– 회자되는 찰스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뉴욕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오히려 압도적 핵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음도 상기

■ 미국의 군사전략은 위험회피가 아닌 적국의 위협 정도가 치명적일수록 공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립

□ 압도적 대응능력과 의지 현시[7]

◎ 북한이 추구하는 '재래전과 제한 핵전쟁 혼합,' '미국과의 전면 핵전쟁 기피' 등을 고려할

7 확장억제 신뢰성은 ▲정치적 의지 ▲정치-군사지원 ▲군사적 능력 등의 영역에서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보장된다.

때 미국의 압도적 대응 의지 및 능력 현시는 억제 효과 발현

■ 한미는 두 가지 선택지 가능: (1) 북한이 핵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 (2)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일부 열더라도 확전 방지에 중점

■ 핵의 파괴력과 제한적 핵전쟁도 결국 전면전으로 확전이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한미는 (1) 선택이 바람직

– 한반도 핵전쟁 억제를 한미전략의 최우선순위로 선정

–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하는 재래전과 전략핵을 사용하는 핵전쟁을 구분하는 교리에 맞서 한미는 모든 핵무기를 같은 범주로 삼고 재래전과만 구분하는 명확한 전략 표출 필요

◎ 한미는 작년 4월 워싱턴선언 이후 지속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 메시지 발신

■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조 바이든, 워싱턴 정상회의, 2023.4; 2022 *Nuclear Posture Review*)

■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55차 한미 SCM 공동성명)

–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핵으로 대응한다는 메시지보다 상기 메시지가 억제 효과 배가

– 북한체제 특성상 핵으로 응징 보복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고 지도자만 무사하다면 군사행동 감행 가능, 보복의 양 보다는 질이 중요

– 반면, 정권 종말을 의미하는 '주요지휘부 제거 작전'이 수행되어 결과를 도출한다면 북한의 전쟁 지속 의지는 사실상 소멸

■ 북한 스스로도 동 표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억제 효과가 있음을 방증

– "정권 종말까지 공개적으로 운운""정권 종말 망발"(김정은, 8기 9차 전원회의, 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

■ 확전 통제를 위해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에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방침 천명도 고려 필요

– 한미는 압도적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핵 선제 불사용을 천명해도 대북 억제력 유지 가능

◎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능력 과시, 특히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은 핵 능력 격차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

■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핵 타격 능력의 정점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2023년 7월 부산작전기지 입항

■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핵 3축 전략자산 중 핵심은 전략핵잠수함

- 캘리포니아 반데버그 기지에서 발사되는 미니트맨 3 ICBM은 최단 거리를 선택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을 통과해야 하므로 이들 국가와의 오인 가능성 존재
- 전략폭격기의 경우 한반도 투사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즉각 대응 한계
- 반면, 전략핵잠수함이 보유한 트라이던트 II는 장소와 항공궤도, 사거리 등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항시 대응 가능

■ 북한도 위와 같은 SSBN의 의미와 능력을 인지하므로 억제 메시지로 작동 가능

◎ 관련하여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는 미국의 대규모 응징보복과는 다른 의미 전달 가능성 배제 불가

■ 북한의 저위력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여 미국도 여기에 상응하는 제한적 혹은 비례적 대응에 그친다는 의미로 오해될 가능성 상존

■ 대북 핵 억제 핵심이 북한이 핵 자신감(nuclear shadow)을 기반으로 재래전 혹은 국지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동종 동량 형태의 비례적 대응 메시지보다는 대규모 응징 억제가 효과적

□ 한미 확장억제 제도화

◎ 한미의 확장억제 작동(핵협의그룹, NCG)

■ 한미는 핵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 핵 운용 과정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의'를 강화

■ 재래식 연합작전계획에 북핵 공격에 대비하는 확장억제 대응계획을 발전시키는 '공동기획' 추진

■ 2024년 상반기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고,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 훈련때 북한의 핵무기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 계획

■ 한미는 2023년 10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한반도에 최적화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을 10년 만에 개정

■ 북한 핵위협에 대한 고도의 대응으로 '핵재래식통합작전'(Conventional & Nuclear Integration: CNI) 발전

◎ 북한의 공세가 오히려 억제력을 강화하는 역작용으로 귀착

■ 북한 도발 시 최대치의 억제가 작동하여 북한의 전쟁 주도권 장악 가능성 제한

□ 미국의 동맹변환: 통합억제

◎ 미국은 인태지역 동맹을 쌍무동맹(hub and spoke)에서 격자형(lattice-like)동맹 체제로 전환

■ "동맹구조의 근본적 변환"(major transformation)

■ 미국의 일방적 방어(protect)에서 동맹국 협력을 통한 투사(project)로 전환 선포

■ 소규모 다자협력체제와 승수효과 통합억제

■ 미국이 추구하는 통합억제는 인도·태평양을 단일전구로 상정하고 대서양 나토 동맹국과 인태지역 동맹국을 연계하여 최대치의 자산 활용

■ 중국 대응이 핵심 목표이나 인태 지역내 북한을 포함한 위협에 대응하는 전반적 능력 향상

■ 중국도 여기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수차례 공헌하고 공식문서로도 확인한 것처럼 동맹국과 통합하여 승수효과를 내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 될 가능성은 부재

■ 중국이 북한과 동맹체제로 연계되어 있으나 미국이 조약동맹을 맺은 국가, 특히 한국과 같은 연합체제 수준의 상호운용성과 대비태세를 미 유지

－미국 주도의 통합억제에 대응하여 중국이 스스로 방어 능력을 향상하겠지만, 군사 측

면에서 북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준은 제한

■ 따라서 북한은 거대한 군사 협력체와 혼자 상대

– 미국 및 동맹국과 군비경쟁에 한계를 느낀 중국이 통합억제 강화에 명분을 제공하는 북한의 핵 질주에 부정적으로 반응가능

– 어떤 형태로든 북한 핵의 효용성은 축소

□ 한미일 통합억제

◎ 역사적 앙금으로 인해 한일 안보협력은 답보 혹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22년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국의 안보협력 본격화

■ 2022년 11월 13일 한미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발표한『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 한일정상회담(2023.3.16.)

■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2023.8)

◎ 한미일 협력(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항)

■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

■ 훈련 명칭을 부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다년간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

– △중단된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 재개 △기 시행중인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정례화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가능한 재난대응·인도지원훈련등 추가 식별 추진

– 미국 인태사를 중심으로 한미일간 협의하여 2~3년 계획 작성

◎ 한미일 3자 훈련

■ 2022.8.8.-14. 다자훈련인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 계기 한미일간 미사일 경보 및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하와이 근해)

■ 2022.9.30. 대잠전훈련 (동해 공해상)

■ 2022.10.6.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동해 공해상)

■ 2023.2.22.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동해 공해상)
■ 2023.4.3.-4. 대잠전훈련 및 수색구조 훈련 (제주 남방 공해상)
■ 2023.4.17.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동해 공해상)
■ 2023.7.16.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동해 공해상)

◎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 합의(2024.6.2.)

■ 캠프 데이비드 훈련의 후속조치
■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억제·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일 TTX(Trilateral Tabletop Exercise)' 시행 합의
■ 고위급협의, 정보공유, 3자훈련과 국방교류협력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연내 작성
■ 추진동력을 위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TMM),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 한미일 안보회의 (DTT) 순환 주최

◎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될수록 북한 핵미사일과 잠수함 등에 대한 억지 능력이 향상되고 북한 핵 효용성 감소

■ 북한이 도발과 핵을 고도화할수록 한미일 협력 동력도 동시 강화

4. 결론

◎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지만, 실제 한국을 상대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미충족

◎ 오히려 북한 핵능력이 향상될수록 한미일 대응능력도 강화되어 북한 핵의 효용성 감소

◎ 다만, 북한 핵 대응을 위한 핵심요소인 한미간 확장억제의 경우 트럼프 전대통령이 '귀환'할 경우 도전 요소 상존

■ 동맹을 비용 편익으로 판단하는 트럼프가 이전 집권 시기와 유사하게 비합리적 방위비분담을 요구할 가능성 배제 불가

■ 특히, 확장억제 제도화의 두 축인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할 경우 확장억제 신뢰 훼손

【토론문】

북핵 대응을 위한 다섯 가지 질문

이 미 숙(문화일보 논설위원)

1. 머리말

박원곤 교수의 '북핵 위협 및 대남정책 전망' 분석 글은 다음 세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김정은이 '영토 완정'이라고 표현하며 대남 점령의지를 과시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조치를 내렸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고, 북한이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둘째, 북한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일은 대외적 선동과 내부적 진의를 제대로 구분해야 가능한 일인데 박 교수는 남북관계에 집중하는 북한전문가들과 달리 한미동맹이라는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를 분석해온 동맹전문가라는 점에서 북한 분석의 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셋째, 박 교수는 결론에서 북한이 핵능력은 고도화했지만, 한국을 상대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족되지 않았고, 북한 핵능력 향상은 역설적으로 한미일 대응능력 강화로 이어져 북한 핵의 효용성이 감소되고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핵에 실존적 위협을 느끼는 이들에게 상당한 진정 효과를 주는 분석으로 깊이 공감한다.

필자는 국제 안보 상황의 흐름을 매일매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는 저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박 교수가 분석한 북핵위협 전망과 관련해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2. 북핵 문제와 관련해 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의제

1) 김정은의 전쟁할 결심에 부화뇌동해선 안된다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남조선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이란 말을 꺼내면서 북방한계선(NLL)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포격 도발까지 벌였다.

박 교수는 발제에서 "현 시점에서 북한은 통일노선 포기보다는 전쟁할 결심에 보다 큰 방점이 있다"면서 "북한이 대남 핵공격 훈련 등을 하고, 전술핵 신속 사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전쟁 결심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박교수는 "한반도 전쟁 발생시 '정권 종말'이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핵 전쟁을 감행할 것이라는 판단은 비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대북 유화파 인사들은 연초에 김정은의 전쟁할 결심을 설파하면서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 협상이 진행될 때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일했던 로버트 칼린은 핵물리학자 지그프리트 해커와 북한 관련 잡지 '38노스'에 쓴 글에서 "6·25전쟁 발발 직전보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제네바 합의 미국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는 "동북아 핵전쟁이 날 수 있다"고 외교안보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썼다. 갈루치는 근거 제시없이 "**내 생각이 그렇다**"고만 밝힌 뒤 "미북 관계 정상화에 우선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이 전쟁할 결심을 했고 한반도가 다시 6·25전쟁 전야 상황이니 김정은을 설득하기 위해선 핵을 용인해주고 미북관계 개선을 하라는 주문과 다름없다. 말하자면 '김정은의 전쟁할 결심'에 대해 과대해석하는 미국의 유화파 인사들의 핵심은 북핵용인과 직결된다. 북한이 핵이 필요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미북관계를 정상화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수교를 하게 된다. 김정은의 전쟁할 결심을 얘기하기 전에 김정은의 언급을 부풀려 과장 해석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려는 미국의 대북유화론자들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2)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한국에 재앙일수도 축복일 수도 있다

박 교수는 발제에서 "북한 핵 대응을 위한 핵심요소인 한미간 확장억제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환'할 경우 도전 요소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동맹을 비용 편익으로 판단하는 트럼프가 이전 집권 시기와 유사하게 비합리적 방위비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고 "확장억제 제도화의 두 축인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할 경우 확장

억제 신뢰 훼손"을 들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War and Peace in Asia, April13,2024)도 "한국은 트럼프 재선시 동맹국중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1기 때 한미연합훈련을 비용문제를 들어 중단시켰고, 김정은과의 신뢰를 중시한다면서 주한미군 감축까지 시사했음을 지적했다. 트럼프 재선시 확장억제나 방위비협상의 문제에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지만, 좀더 크게 볼 때 미국의 한국 핵개발에 대한 정책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최근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을 보면 미국의 핵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 임계이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임계 이하 핵실험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세 번째로 미국이 핵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방부는 핵탄두 현대화도 추진중이다. 군축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시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 더 본격화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 등의 문제를 잘 풀면서 한국의 핵개발 당위성을 편다면 바이든 때보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 동맹 관리를 슬기롭게 하면서 한국의 핵 개발 길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볼만 하다.

3) 중국의 핵 폭주, 우리에겐 북핵보다 더 위협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돌입하면서 핵무기 보유량이 급속하게 늘리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5월 기준 5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2030년에는 보유고가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3년도 연감에는 중국 핵탄두는 410기로 전년 동월 대비 60기(약 20%) 급증했다고 나와 있다. 중국의 핵무기는 러시아와 미국(SIPR 연감 기준 러시아가 4489기, 미국 3708기)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대만과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핵탄두를 급속히 늘리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또 중국은 세계 최다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화해,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고농축우라늄을 수입했다.

중국의 급속한 핵 팽창과 관련해 지난 3월 존 아퀼리노 미인도태평양사령관은 "2차 대전후 이런 위협에 직면한 적이 없다"고 경고했다. 통자오 미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포

린어페어즈에 기고한 '중국의 핵확장 실제동기'(2024년 5월)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핵무기에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여하고있다"면서 "이것은 온건한 책 정책을 견지해 핵능력 개발을 자제했던 전임자들과 큰 차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은 미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핵탄두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핵전략 증강은 향후 미국과의 패권 경쟁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인데 한국에선 중국의 핵 탄두 급증에 대한 최소한의 위기의식조차 없는 실정이다.

올해 아산플레넘에 참석한 중국측 인사는 "중국의 핵무기 증강은 국제적으로 중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고 현재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국은 한반도가 비핵지대가 되길 원한다"고 했다. 중국의 핵 증강은 미국의 위협을 상쇄하기위한 방어용이라고 강변하면서 한국은 NPT체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기막힌 이중잣대는 수용하기 어렵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방관해 사실상 핵개발 길을 묵인했고 이제 와서는 미국과의 패권전쟁에 돌입했다는 이유로 제재완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선 방어 무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제재를 했다. 중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2배로 늘리게 되면 한국에 대한 위압적 행태는 사드 보복 때보다 더욱 거칠어질 것이다. 북한 핵 뿐만 아니라, 중국 핵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관점을 갖고 핵 대응력을 갖춰야 할 때다.

4) '기능장애에 빠진 미국' 로버츠 게이츠 지적에 한국도 대비해야한다

로버츠 게이츠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2023년 11·12월호)에 기고한 '기능 장애에 빠진 슈퍼 파워 (Dysfunctional Super Power)'에서 미국의 안보 위협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면서 외교 안보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수년 내 핵탄두를 2배로 늘리려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 4개 적대국의 위협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6·25전쟁 이후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처럼 강력한 군사적 도전을 당해본 적이 없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5년간 국방부 수장이었던 게이츠 전 장관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4대 핵개발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중국의 부상이 경제 위기 속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중·러·이란 등 권위주의 독재 4국의 핵 증강이 미국 주도의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든다는 평가다. 게이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핵전략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적대국의 핵 증강에 맞서기 위해 억제 위주의 기존 핵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동맹국과 핵 역량을 집단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암시가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북핵만을 바라보면서 확장억제로 충분히 대응가능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해선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파워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4개 독재권위주의 국가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게이츠 장관의 물음에 답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5) 동맹의 핵 개념으로 미국 설득하고 핵 능력확보해야

최종현학술원의 202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불가능" 응답이 91%였다. 2023년 조사에 비해 13.4%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김정은이 핵 선제 사용 법제화 등으로 핵 위협을 고조시킨 결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더 이상 현실 정책으로 추진할 때가 아니라는 게 여론인 것이다.

최종현 학술원 조사에서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8%로 나타났다. 지난해 76.6%였던 것에서 4%포인트 가량 낮아진 수치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명문화한 워싱턴선언이 있었다는 점이다. 워싱턴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핵우산 강화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이기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 뉴욕이 북핵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무릅쓰고도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란 응답은 39.3%에 불과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 자체 핵에 대한 절박함이 커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미국의 핵우산을 믿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로 충분하다'는 말은 공허하다.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한다고 해도 핵우산이 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 핵 역량 확보 작업은 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 중심의 군축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한국의 핵개발 당위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동맹의 핵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

유만으론 부족하다며 유럽 자체의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동맹 핵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좋은 움직임이다. 트럼프 재선시 미국의 나토 탈퇴에 대비하기 위해 프랑스 핵탄두를 독일 등에 배치하자는 논의도 나온다.

특히, 게이츠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독재권위주의진영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자유민주진영의 핵개발 필요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핵확산이 NPT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맞지만, 그간 문제를 일으키면서 핵개발을 진행해온 나라는 독재 및 권위주의 국가들이었고 자유민주진영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묶인 상황이었다. 이 결과 독재권위주의 진영의 핵 개발을 미국이 홀로 감당하면서 동맹국들을 미국의 핵에 의존하게 만드는 불균형을 낳았는데 이 구조가 더 이상 어렵게 됐다.

유럽은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기구가 있어 나토형 핵공유체제가 마련된 데다 영국, 프랑스도 핵보유국이어서 여유가 있다. 반면 아시아에는 나토와같은 안보기구가 없는데다 한국과 일본 , 대만등 동맹국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하고 있어 만일의 사태 발생히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동맹과 함께 하는 핵개발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미국의 대중 대러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한국이 일본과 함께 이를 공론화해 한미일 핵공유, 나아가 한미일 핵개발을 해나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현 안보상황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해내야 하는(Think Unthinkable)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3. 맺음말

올해는 '세계 최악의 상황이 오고있다'는 전문가그룹의 지적이 잇따른 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 근심 가득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고, 미국 유라시아그룹은 '10대 리스크' 보고서에서 "끔찍한 해 (annus horribilus)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러시아·이란을 '말종 국가의 축(Axis of Rogue)'으로 규정하면서 "세 나라가 세계를 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들어선 중국이 공조해 4대 축으로 변화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상반기를 무난히 넘기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전쟁이 지속되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연대전선을 강화하는 지정학적 혜택을 보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한반도에 불길한 기운을 몰고 온다. 김일성은 1950년 소련 지도자 조지프 스탈린의 승인과 지원에 힘입어 6·25 남침을 자행했다. 김정은도

푸틴의 뒷배를 믿고 만용을 부릴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이 북한의 핵을 방조하는 태도를 견지할 경우 북중러 핵에 둘러싸인 한국은 비핵국으로서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 2023'에서 "한국이 자체 핵으로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에 집착하지 말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개발로 남북 핵 균형을 맞춘 뒤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전 대표의 상황 인식은 게이츠 전 장관의 포린 어페어즈 글과 일맥상통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권위주의 독재국의 핵 공세가 강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핵전략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며, 한국도 북한 비핵화라는 신기루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인 북핵 대응안을 동맹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지난해 공동보고서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바 있다. 자체 핵 역량 확보가 어렵다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미국의 전술핵을 보수해 우선 사용권을 갖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초 "북핵이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자각을 외교안보커뮤니티가 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오늘의 학술회의는 의미가 크다. 미국이 더 기능장애에 빠지기 전에 신속하고 치열하게 정부차원에서, 민간차원에서 가슴을 열어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와 발전방향

박 영 준

(국방대학교 교수, 안보문제연구소장)

1. 들어가는 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이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여 한일관계 및 한미일 안보협력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3월 1일에 거행된 3·1절 기념식 행사에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3월 6일, 일제 시대 강제징용공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공 판결에 대해 제3자 변제방식, 즉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을 그 대안으로 추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3월 16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기시다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2018년 이후 한국 측이 효력 정지 입장을 보였던 양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정상화하고, 양국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킨다는 합의를 발표하였다.[1]

이전 정부 시기에 최악의 상황까지 악화되었던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경주하였다. 윤 대통령은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2]

광복절 경축 연설이 행해진 3일 뒤인 8월 18일,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수상과 함께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3국간 안보 및 경제 분야 협력의 확대를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3국 정상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

1 이외에도 양국 정상은 2019년 당시 일본 정부가 취했던 대한 전략물자의 수출 규제조치를 해제하고, 한국도 이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했던 입장을 철회한다는 합의에도 도달하였다.

2 같은 연설에서 대통령은, 후술하듯이,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최대 억제의 역할을 해 왔다고 이례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고 선언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3국이 대잠 훈련 및 미사일 방어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면서 억제태세를 강화하고, 나아가 남중국해 등에서의 중국에 의한 해양안보위협,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침략 행동 등에 대해서도 정세 인식을 공유하면서 공동의 대응을 확대하기로 하였다.[3]

이같이 윤석열 정부 발족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전 문재인 정부 시기의 소위 '전략적 모호성' 기조하에 추진되던 안보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던 국내 전문가층이나 언론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게,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행위,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것은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과도 일치하고, 대외적으로도 '전략적 명료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되었다.[4]

다만 야당을 포함한 국내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이 강하다.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일정책 변화가 '굴욕외교'라고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60%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미국-일본-필리핀 안보협력의 제도화와 같은 격자형(lattice) 동맹 추구가 중국의 대응조치를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5] 북한과 중국에서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보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023년 10월 4일의 평론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한반도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요소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글로벌 타임스를 포함한 중국 관영 언론도 캠프 데이비드

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한미일 3국간의 국가안보실, 국방, 외교, 경제담당 장관회의의 정례적 개최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4 바이든 정부 초기 NSC에서 인도-태평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최근 국무성 차관으로 영전한 커트 켐벨은 최근 허드슨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협력 적극 추진이 용기있는 외교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John Grady ,"State Dept. Official: U.S. Committed to Nuclear Defense of Japan, South Korea", USNI News (2024.4.25.)

5 Mike M.Mochizuki and Michael D.Swaine, "Across Asia, a dangerous game is afoot", *The New York Times* (2024.4.26.)

정상회담은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6]

이같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정책에 대해 상반되는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같은 한일관계 정상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 정책 추진이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정세 변화에 비추어 한국 안보정책으로서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고, 나아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유용한 측면을 갖고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 이외에 한미일 3국이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안보협력의 어젠다들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2. 탈냉전기 국제질서 붕괴와 제2차 냉전시대의 도래

가. 탈냉전기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정책에 있어 한일간 협력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불가피하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는 탈냉전기에 구축된 한반도 질서, 그리고 글로벌 안보 질서가 최근 10여 년간 동요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붕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탈냉전기 국제질서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글로벌 질서 차원에서 구축된 미소간 냉전체제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종언을 고하고, 이를 대체하여 나타난 질서를 의미한다.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그를 대체한 러시아는 냉전체제에서 구축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고 연방국가들이 독립해 나가는 것을 감내해야 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엘친 등의 주도하여 냉전시대의 적수였던 미국과 각종 군비통제 조약과 안보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그리고 후임 대통령들도 적극적으

6 이같은 비판을 제기한 요녕성 사회과학원 연구자 Lu Chao의 평론에 대해서는 David Pierson and Olivia Wang, “Agreement on defense may deepen Chinese ire”, T*he New York Times* (2023.8.21.) 참조. 이 기사에서는 푸단대학의 미국연구소장 선딩리 (Shen Dingli)교수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중국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기 보다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로 러시아와의 핵군비통제 및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핵군비통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1991년 러시아와 START 조약을 체결해서 발사대를 1,600대 수준까지 감축할 것을 합의했고, 2002년 아들 부시 행정부는 모스크바 조약을 체결해서 핵탄두를 2,200발 수준까지 감축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다시 러시아와 New START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보유한 전략핵탄두 배치를 1,550발 수준까지 제한하고, 운반수단도 700기 이하로 감축할 것에 합의하였다.[7] 미국과 러시아는 1992년에 상호 영공을 개방하여 자유로운 군비통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스카이(Open Sky)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 조약에는 나토 국가들 및 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속 34개 국가들이 참가하였다.

탈냉전기의 미국과 러시아는 경제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추진했다. 미국은 냉전기에 서방측 경제선진국들로 구성된 G7에 러시아를 초대하여 1997년부터 G8 체제를 가동하였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원자력 발전에도 파급되었다. 예컨대 미국은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하는 핵연료 공급을 러시아 국영기업인 로사톰(ROSATOM)사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은 냉전시대 양국 전략핵잠수함의 경쟁 무대였던 북극해, 그리고 정찰위성들의 경쟁 무대였던 우주에까지 확대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북극해가 해빙되기 시작하면서, 북극 연안의 국가들이 1996년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를 구축하면서, 미러 양국은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과 함께 그 창립멤버로 동참하였다. 냉전시대 미러 양국은 경쟁적으로 정찰위성들을 우주에 발사하고, 각각 스카이랩과 미르 등의 우주 정거장을 독자적으로 건설해 왔다. 그런 양국이 1998년부터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여타 10여 개 국가들과 국제우주스테이션(ISS) 개발 및 운용을 공동으로 발족하기도 하였다.

탈냉전기의 시대, 미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던 중국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였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 holder)로 규정하면서, 중국을 국제교류와 교역의 네트워크에 참가시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 변화시킨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같은 기조하에서 1995년 새롭게 창설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참가시켰다. 등소평 주도하에 중국도 1992년에 NPT에 가입하고, 1996년에는 포괄적핵

7 Peter Baker, "Senate Set to Give Obama a Victory on Arms Control" *New York Times*, December 22, 2010.

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려는 자세를 보였다.[8]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 것은 탈냉전기 한반도 질서에도 영향을 미쳤다. 냉전체제가 붕괴될 때, 한국 노태우 정부는 1988년에 개최된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 및 소련, 그리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도 대화 및 협력기조를 견지하였다. 1991년 12월에는 북한과 "남북화해와 불가침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상호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였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침략하지 않고, 교류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시기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남과 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배비, 저장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할 것이며,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시설은 보유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다.[9]

이같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 기조는 1993년에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하고, 2002년 이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문제를 봉합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제1차 북핵위기시에는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합의로 이를 해소하려 하였고, 2002년 이후의 제2차 북핵위기 발생시에는 남북한 및 미중일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을 개최하여, 각각 2005년 9월의 9·19 군사합의와 2007년 2월의 2·13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다.[10] 남북관계의 상대적 안정 속에 2000년 6월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2007년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2018년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등 남북 정상회담도 가동되었다.

이같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간의 협력관계 구축,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한 간의 비핵화 합의와 정상회담 등에 기초하여 구축된 탈냉전기 국제질서는 2010년대를 거치면서, 동요되기 시작하고 급기야 붕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8 Aaron L. Friedberg,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New York: Norton, 2011), chap.3, "Congagement" 등 참조.

9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하권)』(조선뉴스프레스, 2011), pp.287-328.

10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창비, 2016) 참조. 송민순은 9.19 합의 시기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로, 2.13 합의 시에는 외교장관으로 관여하였다.

나. 북한의 핵 개발과 한반도 안보질서의 동요

탈냉전기에 남북한 간에 구축된 기본관계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은 2000년대 이후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을 거치면서 거듭된 북한의 핵실험 감행과 공세적 핵전략 추구, 그리고 최근 김정은 정권에 의해 추진되는 대남 정책 수정에 의해 형해화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2006년 10월의 제1차 핵실험을 필두로 2017년 9월에 이르기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를 통해 플루토늄 재처리형 원폭과 우라늄 농축형 원폭, 나아가 수소폭탄 등의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11] 이같은 북한의 핵실험과 그를 가능케 한 영변 핵시설 등은 모두 1991년 남북한 간에 선언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6자회담 합의 등을 모두 위배하고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 능력과 그 운반수단으로 탄도미사일 등을 갖게 된 북한은 그 핵무기 운용에 관한 핵전략에 관한 입장도 변화시키고 있다. 냉전기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중국은 선제불사용 원칙을 일관되게 표명하면서 소위 '최소 억제전략'을 추구해 왔다. 상대적으로 소련은 미국과의 핵경쟁하에서 선제 핵사용을 핵전략의 기본으로 설정해 왔다. 북한은 핵실험 초기에는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다가, 2022년 9월에 공표한 핵무력법을 통해 선제사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공격적 핵전략을 공공연하게 표명하기 시작했다. 핵무력법에 의하면 북한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 즉 ①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②국가지도부나 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③국가 중요 전략대상들에 대한 치명적 군사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④유사시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작전상 필요한 경우, ⑤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 등에 핵무기를 선제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였다.[12] 즉 북한은 자신들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뿐만 아니라, 재래식 공격이 임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표명하는 등 핵 선제공격의 범위와 시점을 구소련의 핵전략보다 대폭 확대한 공격적인 핵전략을 표명하고 있다.[13]

---

11 북한의 핵개발이 냉전기 소련 방식을 모델로 했다는 자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이춘근, 『북한의 핵패권』(인문공간, 2023) 참조.

12 정성장, "북한의 핵지휘통제체제와 핵무기 사용 조건의 변화 평가: 9.8 핵무력정책 법령을 중심으로", 『세종논평』2022-06 (2022.9.14.).

2018년과 그다음 해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에 임했던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노골적으로 대남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2020년 6월 4일과 13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였고, 이후 북한은 남북 간에 추진해 온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등을 철폐하고 판문점에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파괴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12월, 한국을 주적으로 설정한다고 공언하였고, 2023년 12월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석상에서는 "남북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상태하 교전국 관계"라고 새롭게 정의하면서, 북한 인민군은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남북한 관계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같은 북한 정권에 의한 남북 관계의 재정의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무효화 하는 의미를 가진다.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을 보이면서, 북한은 2018년 남북간에 합의된 소위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은 2006년 이후의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2022년 9월의 핵무력법에 의한 공격적 핵전략의 표명에 의해 남북 비핵화공동선언도 형해화시켰다. 2023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에 의한 남북 관계의 재정의로 인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도 무효화시키고 있다. 요컨대 1990년대 초기에 구축된 한반도의 탈냉전 질서, 즉 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는 2023년을 기해 붕괴되고 남북한은 무합의(無合意)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다. 미중 전략적 경쟁 및 러-우 전쟁과 글로벌 강대국 대립 시대

1) 대립적 미중 관계의 전개

탈냉전기에 구축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간의 협력적 질서도 2010년을 전후하여

13 2010년 러시아가 공표한 핵전략 포함 군사독트린에 대한 분석으로는 Olga Oliker, "Moscow's Nuclear Enigma: What is Russia's Arsenal Really For?",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18).; 이홍섭, 「21세기 새로운 위협과 러시아의 대응」(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11.8 과제) 도 참조.

보다 대립적인 질서로 전환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중국 관계가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래 역사상 나타났던 강대국 패권경쟁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2010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로 부상하였다. 2012년 등장한 시진핑 정권은 이전의 후진타오나 장쩌민 정권과 달리 국내적으로 독재적 권력체제를 강화하고, 핵전력을 포함한 전략타격능력을 강화하는 국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도서들을 군사기지화하고, 타이완에 대한 통일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해, 공군 전력을 주변 해역과 공역으로 빈번하게 전개하였다. 이같은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이 미국과 동남아 국가 등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자 중국은 오히려 2019년 공표된 국방백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훼손하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립적인 자세를 표명하였다.[14]

이러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종전의 대중 정책을 변경시키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중국의 대외정책을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 Access Area Denial) 전략으로 규정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수행하던 대테러 전쟁을 종료시키면서, 글로벌 정책의 중점을 대중 정책으로 전환시켰다.[15] 대중 정책의 전환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 조셉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 등이 대중 협력론의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16] 그러나 전문가 그룹에서도 대중 억제론이 지배적 담론으로 변화되었다.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필즈버리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100년간의 마라톤 같은 장기적 패권교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17] 하버드대학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개념을 제시하면서 역사상 기존 강대국에 도전하는 신흥 강국 간의 대립 사례가 16건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12건이 패

14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July 2019).

15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2012).

16 Joseph S. Nye, Jr., "Don't try to 'contain'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28, 2013. M. Taylor Fravel, J. Stepleton Roy, Michael D. Swaine, Susan A. Thompton and Ezra Vogel, "China is not an enemy", *The Washington Post*, 7.3, 2019.

17 Michael Pillsbury, *The Hundred-Year Marathon: China's Secret Strategy to Replace America as the Global Superpower* (New York: St.Martin's Griffin, 2015).

권전쟁으로 귀결되었다고 관찰하면서, 미중 간에도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 그리고 한반도 문제 등이 발화점이 되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18] 이같은 정책 담론 속에 2017년부터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뿐 아니라 군사, 경제 분야에 걸친 보다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창하면서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QUAD)를 결성하였다.[19] 중국의 해군력 및 핵전력 증강에 대응하여 미국의 해군전력 및 핵전력 강화의 방침을 천명하였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대미 수출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여 중국 제조업의 강세에 제동을 가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대중 견제 정책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도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2) 미러 관계의 경색

탈냉전기에 핵 군비통제, 우주개발, 북극해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였던 미국과 러시아 관계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의해 경색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2022년 2월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의해 대립적인 관계로 변모되었다. 이 과정에서 탈냉전기에 양국 간에 체결되었던 다양한 협력조약들이 폐기되고 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G8에서 러시아를 탈퇴시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1987년 구소련과 체결하였던 중거리 핵전력 폐기조약(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 Treaty:INF)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약은 당시 미국과 구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사정거리 500-5,500km의 중거리 핵전력을 폐기하겠다는 것이었으나,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및 배치하고, 중국의 그것도 증대 일로에 있다는 판단하에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20]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020년 5

18 Graham Allison, "The Thucydides Trap", in Richard N. Rosecrance and Steven E. Miller, The Next Great War?: The Roots of World War and the Risk of U.S.-China Conflict (Cambridge, M.A.: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2015).

19 트럼프 행정부의 NSC가 2018년 2월 작성한 The 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이라는 전략문서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 참조. "US must puncture China's Asian dominance, declassified plan says", *Nikkei Asian Review* (2021.1.14.).

20 David E. Sanger and William J. Broad, "Fraying of Cold war pact reveals new problem",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2018.12.12.)『朝日新聞』2018.11.19. 기사도 참조.

월에는 1992년 러시아 등과 체결한 오픈 스카이 조약(Treaty of Open Skies)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조약은 상대의 군사시설을 사찰하기 위해 탈냉전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하고 도합 34개국이 서명한 조약이었으나, 미국은 러시아가 이 조약을 남용하여 미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탈퇴 결정을 내린 것이다.[21]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도발 이후 더욱 경색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고전을 겪게 되자, 전술핵 사용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2023년 2월에 행한 연설에서는 2010년 미국과 합의한 뉴스타트 조약(New START)이 2026년 만기를 맞이하게 될 때 갱신하지 않을 것을 언명하였다.[22] 이 경우 전략핵탄두를 1,550발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한 조약의 범위를 넘어 러시아의 핵탄두 증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2023년 11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서도 탈퇴한다는 방침을 선언하였다.[23] 즉 탈냉전기를 전후하여 미국과 러시아가 구축한 핵 군비통제 체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INF 조약, 뉴스타트(New START) 조약, 오픈스카이 조약들이 폐기되면서, 양국은 핵 군비통제와 관련한 거의 무 조약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탈냉전기에 합의한 협력레짐도 붕괴되고 있다. 러시아는 1990년대부터 미국과 공동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프로젝트에서도 탈퇴할 것을 표명하였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해빙되고 있는 북극해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개최되지 않고, 러시아가 담당하던 의장국 지위도 2023년 5월을 기해 노르웨이에 넘겨지게 되었다.[24]

경색 국면을 더해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향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과, 그리

---

21 Tim Morrison, “Abandon the open skies treaty”,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2020.5.23.). 미국 NSC의 선임 국장을 역임한 이 칼럼의 필자는 이미 미국 정보당국과 군지휘관들이 Open Skies 조약에서의 탈퇴를 주장해 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22 David E.Sanger, “Putin’s shift may signal the end of nuclear arms control”, *The New York Times* (2023.2.23.).

23 The Editorial Board, “Nuclear talks with China are essential and long overdue”, *The New York Times*(2023.11.7.)

24 Steven Erlanger, “Melting ice and heated global military tension”, *The New York Times* (2023.6.2.)

고 2024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이란 전쟁의 여하에 따라 탈냉전기의 국제안보질서를 크게 동요시키고 붕괴시키는 양상도 노정시키고 있다. 이같은 국제안보질서의 동요와 붕괴는,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및 핵위협 증대와 더불어, 한국의 국가안보환경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탈냉전기에 한국은 각각 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체결한 바 있다. 그 이후 한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및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이들 국가들이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 강대국간 대립 관계를 노정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나 외교에 있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양상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중러 강대국 관계의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기존의 우호적인 외교 및 경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25] 필자도 이같은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중러 관계가 구냉전시대와 같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공세적 핵전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 군사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우선적인 안보 및 외교전략은 우선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타 국가들과도 다층적 안보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 혹은 그룹들은 역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 그리고 6·25전쟁 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고, 1953년 7월 참전 16개국 공동정책선언인 워싱턴선언에 의해 한반도에 재차 군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시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 다음 장에서는 미일동맹하의 일본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한국의 안보와 외교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한국 대외 안보자산으로서의 미일동맹과 한일 안보협력

국내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에서는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상존하는

25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대표적이다. 위성락 "외교전략 없으니 정권마다 우왕좌왕···미·중·러·일 포괄 외교좌표 필요"『서울경제』 2024.4.22.

것 같다. 일본 자위대가 새로운 군사력을 갖게 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부대가 창설할 경우 항상 '군국주의의 부활' 혹은 '한반도 재침'의 뉘앙스로 이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26] 그러나 일본 자위대의 전체적인 방위전략, 그리고 미일간의 동맹전략, 나아가 일본 내에 소재하는 유엔군 후방사령부의 구조를 꼼꼼히 파악하면, 오히려 일본 자위대 및 미일동맹의 존재가 한국의 안보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안보자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일안보협력, 혹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메커니즘이 구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 일본의 안보전략과 자위대 전력 증강

일본 육해공 자위대는 1954년 창설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헌법은 육해공군의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위대는 창설 당시부터 군대가 아니라는 정체성하에서 그 보유전력이나 대외활동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가해졌다.[27] 그런 일본의 안보전략과 자위대 전력은 탈냉전기를 맞아 일본 내에서 보통국가론이 대두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유지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PKO법이나 대테러법 등을 제정하였고, 육해공 자위대와 통합막료감부, 방위성과 수상관저 등 방위 및 안보 관련 제도들도 여타 국가의 그것과 동일한 구조 및 기능으로 재편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일본 정부가 책정하는 전략문서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및 중국의 해군과 공군의 원거리 투사 활동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위협인식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 증강과 방위비의 편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에 공표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서와 방위전략서 등도, 일본이 "전후 가장 엄중한 안보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안보상황을 총평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및 중국 군사력의 주변 해역 투사 등을 위협요인으로 제기하였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일본은 상대 국가에 의한

---

26 박성황, 「북한 급변사태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소고: 미중일간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27 (2019); 김재현, 「日 '군국주의 부활' 야욕 철통 경계해야」, 『경기일보』(2021.11.4.).

27 냉전기 일본의 군사력 건설과 대외활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10여가지 비군사화 규범에 대해서는 박영준, 「일본 방위산업 성장과 비군사화 규범들의 변화: '무기 수출 3원칙'의 형성과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한일군사문화연구』 18 (한일군사문화학회, 2014.10) 참조.

착륙 및 상륙작전, 미사일 전쟁, 사이버 전쟁 등의 미래전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그동안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온 '반격능력'의 보유 방침을 천명하였다.[28]

이같은 안보전략하에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기존의 지상배치 사단급 부대들에 더해 2018년부터는 해병대의 기능을 갖는 '수륙(水陸)기동단'을 신편 하였고, '반격능력'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종전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위함, 잠수함, 소해함, 해상초계기 등의 전력을 보유하여 세계 3-4위권 전력 규모로 평가되어 온 해상자위대는 2018년 이후 기존의 헬기탑재호위함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하기 시작하여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게 되었다. 또한 '반격능력' 개념에 따라 미군이 운용하던 토마호크 미사일을 1,000여 기 도입하여 자위대 함정에 배치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현재 F-4 전투기, F-2 전투기, F-15J 전투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F-4 전투기를 대체하여 F-35 스텔스 전투기를 100여 대 도입하고 있으며, F-2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기를 영국 및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에 더해 '반격능력'보유의 일환으로 사거리 1,000km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JASSM-ER을 도입하고 있다.

이같은 전력 증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은 2022년 안보전략서 등에서 GDP 대비 방위예산을 기존 1% 미만 수준에서 2%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하였고, 현재 기시다 내각은 법인세 및 연초세 등의 인상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전력을 운용하기 위한 지휘구조로서 일본은 기존의 통합막료의장 이외에 통합사령관 직제를 신설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작전적 지휘를 일임하는 상부구조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자위대의 전력 증강 및 지휘구조 개편은 냉전기의 그것과 비교하여 대폭적인 변화의 성격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안보전략서 등에서 표명되고 있듯이, 그 중점은 중국 및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일본 안보전략서가 대외적으로 미일동맹의 강화뿐만 아니라, 쿼드 국가들, 한국, 유럽 나토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 등 '동지(同志)국가(like-minded countries)'들과의 안보협력을 일층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28 2022년 12월에 일본 정부가 공표한 3가지 안보전략문서에 관한 종합적 분석으로는 박영준, 「군사대국의 부활 혹은 보통국가의 완성?:일본 기시다 내각의 안보전략 3문서 공표와 '전후 안보정책의 대전환'」『일본연구논총』57 (2023년 6월) 참조.

나. 미일동맹과 다층적 안보협력

일본의 안보전략이 보다 적극화되고 자위대 전력이 증강된다고 하더라도, 비핵 3원칙 등에 의해 핵무기 보유가 금지되고 있는 일본이 단독으로 북한이나 중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제약이 뒤따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자신들 안보정책의 중요한 다른 한 축으로 간주해 왔다.

미국과 일본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태평양을 무대로 혈전을 벌이던 적대국이었다.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은 병력을 일본에 진주시켜 점령정치를 뒷받침하게 하였다. 한편 미 점령군 총사령부의 점령 기간, 국제적으로 미소 간의 냉전체제가 전개되고,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을 통해 아시아 대륙을 장악하고, 한반도가 북한군의 남침에 의해 전장이 되었던 일대 변화가 펼쳐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치가들은 1946년 제정된 헌법하에서 육해공군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는 자신들의 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미국에게 동맹조약체결을 제안하였고, 미국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1951년 9월의 미일안보조약, 그리고 1960년 1월의 그 개정 조약인 미일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해 미일동맹이 성립되었다.

성립 당시에는 승전국과 패전국 간의 비대칭적 동맹이었던 미일동맹은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그 능력이나 활용 면에서 전세계 40여 개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유럽의 나토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동맹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였다. 주일미군은 총 4만 5천 명 규모로서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가장 많은 병력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 주일 미 육군은 제1군단이 주축이 되어 육상자위대 총대사령부가 위치한 도쿄 근교 자마 기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일 미 해군의 주축을 이루는 제7함대는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부가 위치한 요코스카 기지를 모항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 제5공군이 주축을 이루는 주일 미 공군은 항공자위대 총대사령부와 같이 요코다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미 제3해병원정단은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등에 배치되어 있다. 주일미군 사령관은 통상 제5공군 사령관인 공군 중장이 담당하며, 하와이 소재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주일미군을 관리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관할하는 한미동맹과 달리,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작전지휘는 별개로 행사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공동의 전략운용지침(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최적의 군사적 대응을 하도록 하는 전략방향을 공유해 왔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냉전시기였던 1978년에

책정되었고, 이후 탈냉전 시기인 1997년에 개정되었고, 다시 2015년에 개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 1997년 가이드라인은 한반도와 대만 등에 '주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각기 전방 지역에서의 작전과 후방지역에서의 지원활동을 한다는 역할 분담이 규정되었다. 이를 개정한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한반도 및 대만과 같은 '중요영향사태' 이외에 일본의 안보에 직결되는 '존립위기사태'가 글로벌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우주 및 사이버 분야에서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도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공동 대응한다는 점이 합의되었다. 최근 2024년 4월 10일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수상은 북한과 중국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에 합의한 바 있다.[29]

이같은 공동의 전략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한미동맹 하의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그러하듯이,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지휘소 연습으로는 킨에지(Keen Edge), 증원 기동연습으로는 킨소오드(Keen Sword)를 실시하고 있으며, 육상자위대와 미 육군 간에는 오리엔트 쉴드(Orient Shield) 훈련, 미 해병대와 일본 수륙기동단 간에는 아이언 피스트(Iron Fist),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 간에는 노블 퓨전(Noble Fusion) 등이 실시되고 있다.[30]

최근 일본 내에서는 미일동맹 이외에도 일본의 안보를 지원해 줄 우방국들, 예컨대 한국, 호주, 인도 등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중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31] 그러한 방향에 미국도 동의하여 2017년에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호주 및 인도를 참가시켜 쿼드(QUAD)가 결성되었고, 2023년 8월에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가, 2024년 4월에는 미국-일본-필리핀 간의 안보협력체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같은 다층적 안보협력체 차원에서도 연합훈련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과 호주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테리스먼 세이버(Talisman Sabre) 훈련에 일본이 영국 및 캐나다 등과 참가하고 있고, 미국과 인도가 실시하는 말라바르(Malabar) 훈련에 일본도 해상자위대 함정을 참가시키고 있다. 미국 주관으로 괌

29 United State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Global Partners for the Future* (2024.4.10.).

30 임기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플래닛미디어, 2022) 등을 참조.

31 東京財團 安全保障研究 プロジェクト,『新しい日本の安全保障戦略：多層協調的安全保障戦略』(東京財團政策研究部, 2008.10). 이 보고서는 우에키 치카코 와세다대학 교수, 진보 켄 게이오 대학 교수, 카미야 마타케 방위대학 교수 등이 주관하여 집필.

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국적 해상훈련 시드레곤(Sea Dragon)에도 일본이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격자형 동맹(lattice-lime alliances)으로 지칭한 소다자협력체계(Minilateral Cooperation)의 확대 구상을 일본이 이전부터 제안해 왔고, 최근에 구현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다. 유엔사령부 후방기지와 한미연합사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강되는 일본 자위대의 전력, 그리고 강화, 확대되는 미일동맹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유용한 존재라고 생각되는 것은 일본의 안보전략서 등에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한국을 안보협력의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고, 미일동맹 차원의 '가이드라인 2015'문서 등에서 한국 등에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작전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일본 내에 소재한 유엔사 후방기지 7개소가 한반도 유사시 작전을 통제하게 될 유엔사령부, 즉 한미연합사의 전쟁 지휘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7개소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왜 한미연합사 겸 유엔사령부의 임무 수행에 중요한 것인가.

1950년 6월25일, 북한의 전격적인 남침에 의해 6·25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게 북한의 군사행동을 비난하고, 이를 격퇴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미국의 대일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그 지휘를 맡도록 한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유엔 회원국 16개국이 전투병력을 유엔군사령부에 파견하게 되었는데, 이 병력들과 전쟁지원 물자들이 일본을 경유하여 한반도에 투입되었던 관계로 1951년 9월, 일본 요시다 수상은 미국 애치슨 국무장관과 교환공문을 채택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유엔군에게 일본 주류(駐留)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초에는 일본 내 70여 곳이 유엔군사령부 멤버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지로 제공되었다. 1953년 7월, 6·25전쟁이 종전을 맞게 되자 16개 참전국은 워싱턴선언을 채택하여 재차 한반도에 전쟁 재발 시에는 참전할 것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1954년 2월부터 6월에 걸쳐 일본 정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 등 12개국과 지위협정을 체결하여, 향후에도 일본 내 7개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32]

1957년 당시 도쿄에 위치하던 유엔군사령부가 서울로 이전하게 되자, 유엔군사령부는 도쿄 자마 지역에 유엔사 후방사령부를 설치하여, 일본 내에 소재하는 요코다, 요코스카, 자마, 이와쿠니, 가데나, 후텐마, 화이트비치 등 7개 기지에 대한 관리 임무를 부여하였다.[33] 그리고 일본에 주재하는 9개국, 즉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필리핀, 튀르키예, 타일랜드, 뉴질랜드 대사관의 무관들은 유엔사령부의 연락장교 역할을 겸임하게 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이들 유엔군사령부의 연락관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사항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한국에 대한 전평시 작전통제권이 기존의 유엔군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관리와 유엔사 회원국들의 유사시 전력제공 임무만을 담당하게 된 이후에도 일본 내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의 역할이나 위상은 변화되지 않았다.

이같은 역사적 경위를 확인한다면, 향후에 한반도에서 미래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 소재 주일미군과 자위대, 그리고 유엔사 후방기지 등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주일미군은 6·25전쟁 시 일본에 주둔하던 제24사단과 제25사단 등이 그러했듯이, 하와이 소재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감독하에 한반도에 전개되어 전투 수행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주일미군이 사용하게 될 항만이나 공군 기지, 그리고 유엔사 후방기지 등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후방지원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북한 등의 군사적 행동에 의해 '존립위기사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그에 더해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군사령부 멤버 국가들은 1953년 워싱턴선언에 따라 재차 한반도에 병력이나 물자 투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가 병력과 물자의 집결 및 중계기지로 활용될 것이고, 이 과정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전망을 염두에 둔다면 한반도 미래전쟁 발생 시 한반도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하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겠지만, 일본에 소재한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 그리고 유엔사 후방기지도 한반도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2023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내 유엔사 후

32 장광현, 『다시 유엔사를 논하다』(굿프렌드 정우, 2020) 등 참조.

33 필자가 2023년 12월5일, 도쿄에서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의 지휘관을 담당하는 호주 대령과 인터뷰했을 때, 그는 자신에 대한 지휘권은 한국의 유엔군사령관 라캐머라 장군이라고 답변하였다.

방기지는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있는 곳이고,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개소 후방기지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같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한반도 안보를 위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한일간, 그리고 한미일 간에 지속적인 안보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과제

지난 수년간 한국은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국면에 임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을 중시한다는 '안미경중'의 정책을 취하면서,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의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23년 8월의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세적 대외정책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동맹국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과도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서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의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선택을 한 것이다. 이같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한국은 북핵 대응 및 지역정세의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 북핵위협 대응 군사협력

1) 한미일 정보공유, 대잠훈련,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핵능력 증대 및 그에 기반한 공세적 대남 정책 선회는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한국은 그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는 3축체계, 즉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킬체인(Kill Chain), 응징보복체제(KMPR)를 구축해 왔고, 핵무기 개발은 유보하지만 미사일전력, 잠수함 전력, 스텔스 전투기를 근간으로 하는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하여 대북 억제태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한미 간에도 2023년 4월

의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여 미국이 확장억제의 전략하에 제공하기로 한 핵전력의 기획과 운용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34]

이같은 한미간 핵억제 태세에 더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핵 위협 대응을 위해 더욱 공고한 태세를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우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처럼 한미일 3국은 북한 핵에 대한 긴밀한 정보공유 및 그를 바탕으로 한 연합 대잠훈련, 연합 미사일방어훈련, 연합 공중훈련 등을 실시하며, 평시의 대북 억제태세를 나타내 보이고, 유사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한미일 북핵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2014년 3국간에 체결한 TISA, 그리고 2016년에 한일 간에 체결한 GSOMIA의 틀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위성자산 등으로 확보한 대북 군사정보, 일본이 음성정보나 위성정보로 획득한 대북 군사정보, 그리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획득한 북한 군사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취합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은 공동으로 대잠수함 방어훈련, 미사일 방어훈련, 그리고 공중기동훈련 등을 이미 실시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북한은 잠수함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주둔 기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뛰어난 해상초계 능력을 갖춘 일본의 참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일 3국의 연합 대잠훈련은 그에 대응하는 방어체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사일 방어체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미국과의 협력하에 해상발사 미사일 방어체제 SM-3를 이지스함에 탑재하고 있으며, 지상배치 PAC-3 미사일을 일본 본토 내에 배치해 두고 있다. 한국도 지상배치 레이더를 포함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같은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능력에 더해 미국의 위성정보 자산과 미사일 방어 기술이 결합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방어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배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 핵에 대한 유효한 대응 수단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괌에 전개한 전략폭격기 전력이

34 미국의 핵전력을 관할하는 전략사령부와 한국에서 창설될 전략사령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될 것이다. 2023년 4월의 한미간 워싱턴회담 합의에 따라 수시로 미국의 전략폭격기같은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이 북한의 핵위협 가능성을 낮추는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실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 한국과 일본의 공중전력들이 이를 공동으로 호위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대북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한미일 연합훈련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실전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국내법이나 조약의 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은 호주나 영국, 필리핀 등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나 원활화협정(RAA)을 체결하여, 상대국가 병력들의 일본 주류나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체제를 정비해 두고 있는데, 우리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법 정비나 관련 조약의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한미일 확장억제 연대 구축 및 유엔사 체제 강화

미국은 아태 지역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각각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하였고, 수시로 양국과 확장억제 협의를 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각기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대표적 비확산 규범인 NPT 회원국이어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 제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한 등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양국에 개별적으로 제공하기로 공약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한미일 3국이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전략협의체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35]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은 보다 신뢰성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 태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후술하듯이 글로벌 핵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정책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앞장의 서술에서 설명했듯이 유엔군사령부 체제는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의 하나이다. 다만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분쟁 상황 시에

35 이에 대한 시론적 주장으로는 박영준, 「인도-태평양 지역 비핵국가들의 확장억제 연대 구상: 한국과 일본의 핵억제정책 유사성과 연대 가능성을 중심으로」『국가전략』 제29권 2호 (세종연구소, 2023년 여름호) 참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체제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두어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일본이 그러했듯이, 한국이 유엔사전력제공국들과 개별적인 형태로 지위협정을 체결하여, 만일의 경우 전력제공국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사의 지원을 받아야 할 한국이나, 유엔사 후방기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본이 정작 유엔사령부의 멤버 국가들은 아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이기도 한 한국이 유엔군사령부의 멤버가 되어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해야 하고, 후방기지를 관할하는 일본은 옵서버 지위의 형태로 그 관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나. 지역 및 국제질서 안정을 위한 협력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글로벌 안보질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으로 말미암아 제2차 냉전 시대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미일 3국은 공동의 안보협력 논의를 통해 이같은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적 군사정책에 대한 억제태세를 강화하는 공동정책추진과 동시에, 이들 국가의 결속 강화를 해소하고 상호 대화를 촉진하는 정책들이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대외적 공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미일 3국은 우선 동중국해 및 대만 방면에서 해양질서의 안정, 해양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이 적극 주도하고 있는 해양항행작전에 한국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대중 군사적 공세성을 억제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또한 2014년 칭다오에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21개국이 참가한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에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규범(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CUES)'이 채택되었듯이, 해상에서의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도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36]

---

36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Annual Report to Congress* (Washington, D.C.:U.S. Department of Defense, 2015), p.65.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도 한미일 3국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일 러시아가 2026년에 미국과 체결한 뉴스타트 조약에서 이탈하여 전략핵탄두 생산을 늘리고, 미 국방당국이 예상하듯이 중국의 전략핵탄두 규모가 현재 400여기 수준에서 2030년대까지 1,500발에 이르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미국의 핵능력 규모는 러시아와 중국의 합계 전력에 비해 열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글로벌 핵질서는 물론,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제공하기로 공약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에도 불신이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은 협력의 범위를 국제핵질서의 안정 이슈에도 확장하여, 공동의 핵안보 태세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 과정에서 현재 미국이나 일본, 한국이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들을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등을 직시하여, 한미일 3국이 안정적인 핵연료의 공동생산 같은 이슈도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협의에는 유럽에서의 나토 국가들도 참가하면 좋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 강화는 글로벌 안보질서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냉전 시기에 헨리 키신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중관계 정상화를 통해 데탕트 외교를 전개했듯이,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 강화를 저지하는 제2차 데탕트 외교도 고려해 봄직하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도 이미 상호관계가 깊숙하게 구축된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내심 바라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미중 관계의 관리 내지는 회복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2024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런 점에서 지역 질서 및 글로벌 질서의 안정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5. 맺는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동되기 시작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한국의 안보정책과 외교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을 계기로 한국은 종전에 취해오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하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더불어 한반도 안보 및 글로벌 안보 질서에 기여한다는 '전략적 명료성'을 분명하게 밝히기 시작했다.

국내 일각, 그리고 중국과 북한 등은 이러한 한일관계의 정상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에 대해 냉전기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고는 북한의 핵능력 증강 및 공세적 핵전략의 표명을 고려할 때, 그리고 최근 북한의 행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정세의 격변을 고려할 때, 한일 외교 및 안보협력의 재개,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불가피하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우선 북한이 종전의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나타난 인식에서 벗어나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며, 적대적 교전 관계라고 규정한 행태 등은 주의해야 할 현상이다. 그에 더해 북한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핵전략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공세적인 군사전략 및 대남정책에 대응하고, 우리의 억제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3축체계 구축 등의 노력과 병행하여, 한일간, 나아가 한미일간 대북 억제태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일간 GSOMIA의 정상화, 그리고 한미일간 정보공유 및 대잠공동훈련, 미사일방어 공동훈련의 실시 등은 이러한 견지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한미일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유엔사령부에 한국을 정식 멤버로, 일본을 옵서버로 참가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안보정세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국면의 전개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세계 10위권 내외의 국가로 부상한 한국으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종전과 달리 인-태 지역이나 글로벌 안보 질서의 안정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 단독으로 글로벌 안보 질서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같은 이익과 가치를 공유한 일본,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하여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은 그런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같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자유항행 보장 등을 추구하고, 나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동요되고 있는 국제 핵 군비통제 질서 등의 안정을 되찾으려는 외교안보적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한국의 외교안보어젠다를 확대하여, 인-태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글로벌 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한중일 정상회담 등의 플랫폼을 통해 중국 등과의 관계 악화를 방지하는 외교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

서 5월 말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 같은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추진된 한일협력의 정상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불안정성을 더해 가는 한반도 안보 질서 및 글로벌 안보 질서에 대응하는 우리의 안보적, 외교적 수단을 더해 줄 것이다. 이러한 안보 자산들을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지키고 확장하려는 외교정책 개발 및 실행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하권)』(조선뉴스프레스 2011).

박성황, 「북한 급변사태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소고: 미중일간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한일군사문화연구』 제27집 (2019).

박영준, 「일본 방위산업 성장과 비군사화 규범들의 변화:'무기수출 3원칙'의 형성과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한일군사문화연구』 제18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4.10).

박영준, 「군사대국의 부활 혹은 보통국가의 완성?:일본 기시다 내각의 안보전략 3문서 공표와 '전후 안보정책의 대전환'」『일본연구논총』 제57호 (2023년 6월).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창비, 2016).

위성락 "외교전략 없으니 정권마다 우왕좌왕···미·중·러·일 포괄 외교좌표 필요" 『서울경제』 2024. 4.22.

이춘근, 『북한의 핵패권』(인문공간, 2023).

이홍섭, 「21세기 새로운 위협과 러시아의 대응」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11.8 과제).

임기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플래닛미디어, 2022).

장광현, 『다시 유엔사를 논하다』(굿프렌드 정우, 2020).

정성장, "북한의 핵지휘통제체제와 핵무기 사용 조건의 변화 평가: 9.8 핵무력정책 법령을 중심으로", 『세종논평』2022-06 (2022.9.14.).

Allison, Graham, "The Thucydides Trap", Richard N. Rosecrance and Steven E. Miller, *The Next Great War?: The Roots of World War and the Risk of U.S.-China Conflict* (Cambridge, M.A.: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2015).

Baker, Peter, "Senate Set to Give Obama a Victory on Arms Control", *New York Times*, December 22, 2010.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2012).

The Editorial Board, "Nuclear talks with China are essential and long overdue", *The New York Times* (2023.11.7.)

Erlanger, Steven, "Melting ice and heated global military tension", *The New York Times* (2023.6.2.)

Fravel, J., M. Taylor, Stepleton Roy, Michael D. Swaine, Susan A. Thompton and Ezra Vogel, "China is not an enemy", *The Washington Post*, 7.3, 2019.

Friedberg, Aaron L.,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New York: Norton, 2011),

Grady, John, "State Dept. Official: U.S. Committed to Nuclear Defense of Japan, South Korea", *USNI News* (2024.4.25.)

Mochizuki, Mike M. and Michael D.Swaine, "Across Asia, a dangerous game is afoot", *The New York Times* (2024.4.26.)

Morrison, Tim, "Abandon the open skies treaty",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2020.5.23.).

Nye, Jr., Joseph S., "Don't try to 'contain'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28, 2013.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Annual Report to Congress* (Washington, D.C.:U.S. Department of Defense, 2015)

Oliker, Olga, "Moscow's Nuclear Enigma: What is Russia's Arsenal Really For?",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18).

Pierson, David and Olivia Wang, "Agreement on defense may deepen Chinese ire", *The New York Times* (2023.8.21.)

Pillsbury, Michael, *The Hundred-Year Marathon: China's Secret Strategy to Replace America as the Global Superpower* (New York: St.Martin's Griffin, 2015).

Sanger, David E. and William J. Broad, "Fraying of Cold war pact reveals new problem",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2018.12.12.)

Sanger, David E.,"Putin's shift may signal the end of nuclear arms control", *The New York Times* (2023.2.23.).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July 2019).

United State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Global Partners for the Future (2024.4.10.)

東京財團 安全保障研究 プロジェクト,『新しい日本の安全保障戦略：多層協調的安全保障戦略』(東京財團 政策研究部, 2008.10).

【토론문】

김 재 천(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1. 들어가며

국제질서는 최근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 창출하고 관리해왔던 자유주의(Liberal) 국제질서가 큰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인류 보편적 가치가 된 자유 민주 인권 법치가 국내외적으로 존중받고 물품과 서비스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경제질서 정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자국의 정치 경제 모델을 국제정치와 경제질서에 반영하여 형성된 국제질서이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질서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번영을 이뤄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보호, 강화하는 정책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2023년 한일관계 복원의 추동력을 확보했고, 한미일 3국은 한미일 3각 안보 협의체를 탄생시켰다. 한미일 안보협의체 발족은 수정주의 진영의 도전과 한미일의 응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수정주의 진영의 도전과 한미일의 응전

2.1. 수정주의 국가의 연대 강화

국제질서의 변혁기가 도래하면서 세계의 분쟁지역 대부분은 신냉전의 진영논리에 함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의 승리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과 같은 수정주의 진영 국가의 승리고 자유주의 진영 국가의 큰 손실이다.

미소 냉전이 다소 급작스레 종식되었을 때 북한은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러시아와 중국

이 차례로 한국과 수교하자 북한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동유럽의 공산 독재정권이 줄줄이 무너질 때 김일성은 불안에 좌불안석했고, 핵무력 개발에 본격 돌입하며 자주국방 노선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탈냉전의 국제질서는 북한에 가혹한 시련을 안겨줬다.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한 국가들이 역대급 발전을 이뤄낼 때 고립을 선택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의 연속이었다. 이런 북한에 신냉전 시대의 도래는 큰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영화의 국제질서에서 북한의 몸값이 한껏 올랐다. 중러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한다. 북한도 이를 알고 전체주의 국가의 앞잡이 역할을 자임해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내놓고 지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김정은은 2023년 방러 중 푸틴과의 정상 만찬 자리에서 한미일을 "악의 무리"로 규정하고 이들을 "징벌하고 정의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중러는 이러한 북한을 감싸고 있다. 진영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중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시늉조차 안 한다.

2.2. 공통 위협인식과 한미일 안보 협의체 발족

동맹이나 안보 협의체가 태동하고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 간의 "공통된 위협인식(common threat perception)"이 발생하고 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3국 안보 협의체를 발족한 이유는 수정주의 국가 진영의 도전을 공통된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고, 긴밀한 3국 안보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3국 모두 자유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고, 수정주의 국가 진영의 연대 강화와 현상 변경 시도를 핵심 국가이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한미일 안보 정책 연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한미일 안보 협의체를 실제로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일관계가 어려워서였다. 따라서 한미일 안보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합의 파기와 징용공 배상 판결로 소원해진 한일관계 복원이 급선무였다.

한일관계는 한일 양국 모두 국내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정치 작업을 생략한 채 일본에 상당한 양보를 하면서 한국 정상으로서는 4년 만에 전격 방일해 한

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 이러한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한일관계 복원의 추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속전속결식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던 국민이 추후 대통령의 결정을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역사나 영토 문제 등 한일 사이의 산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신냉전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복원을 서둘러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응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많은 국민이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도를 넘어 거세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북한을 싸고돌자 한일관계를 개선해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는 중러 역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3. 한미일 안보 협의체의 향후 과제

한국의 관점에서 한미일 안보 협의체의 발족은 신냉전의 진영화 구도에서 자유주의 진영과 전략적 유대를 강화해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더 많은 힘을 보내겠다는 전략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보존 및 강화가 한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미일 안보 협의체를 활용해 한국은 인도 태평양 본격 진출의 토대를 마련했고,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제도 확보했고, 북중러 수정주의 진영의 한반도로의 세력권 확장을 방어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기제를 확보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시 관건은 지속성 확보이다. 한미일 3국은 3국 안보협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협의체의 제도화에 큰 공을 기울였다. 사실 각급에서 3국이 '어떠한' 협력을 도모할 것인지는 2022년 프놈펜 3국 정상 공동선언문에 매우 상세히 나와 있음.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이러한 각급의 협력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즉 협력의 제도화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3국 협력을 제도화한다면 3국 협의체는 국내정치적인 변화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교 안보 정책의 방향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가진 정치인이 최고지도자가 됐을 경우 아무리 제도화된 외교적 합의라도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화와 더불어 충분한 국민적 지지를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는 외교 합의를 최고지도자라도 제멋대로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